

연구총서 01-10

•

통일한국의 안보정책방향

박영규

통일연구원

요 약

한반도 통일은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면 서도 도전적인 전략적 과제를 제기할 것인 바, 이는 통일한국 의 등장이 동북아 전략환경과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통일한국이 취하게 될 안보정책은 역내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통일한국의 안보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안보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통일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시의 동 북아 안보구조와 역내국가들의 통일한국정책을 분석·전망하였 다. 이와 함께 통일한국의 상대적 위상과 안보위협을 평가하고 이들 분석 및 전망을 토대로 통일한국의 안보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1. 국가안보의 개념과 통일한국의 안보정책

국가안보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통일한국의 안보정 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가안보의 개념을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본래 안보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개별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특 수한 여건에 따라 안보의 개념, 범위,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통일한국의 경우에도 통일한국이 처하게 될 특수한 안보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안보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둘째, 안보는 개인, 사회, 국가, 국제체제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문제이며,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함께 군사는 물론 정치, 경제,

자원, 환경, 생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안보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파악,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보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셋째, 안보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한정된 자원, 즉 예산과 인원 등을 어떻게 활용하여 추구하는 목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안보 목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경우에도 통일에 따른 안보요소들의 변화를 고려하되, 안보위협을 주체, 대상, 긴박성 등을 신중히 평가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인원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방향으로 안보정책을 입안·추진하여야 한다.

2. 통일한국의 안보환경

가. 동북아 안보질서의 특징

통일한국의 등장 시점으로 상정하고 있는 2015년경 동북아 안보질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다.

우선 동북아 안보질서는 하나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강대국들로 구성되는 이른바 ‘비대칭적 다극화’의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종합국력을 보유하는데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기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에도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기 위해, 그리고 미국의 대일 군사적 역할 확대 요구, 일본내의 우경화 강화 및 동아시아

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 가속화 등으로 군사력 증강을 지속할 것이나, 일본 특유의 국내적 제약요인과 미·일 동맹체제의 유지 등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구소련 해체 이후 불안정한 독립국가연합의 미래와 러시아의 국내정치·경제적 불안에 따라 일차적으로 국내문제의 해결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 우위의 동북아 안보질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모든 분야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역내 국가들간 분쟁의 잠재적인 요인들이 지속·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미국과 중국간에는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관계에 있는 바,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행사라는 대안을 선택할 경우 미·중간의 긴장 고조는 불가피할 것이다. 중·러간의 오래된 영토분쟁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불법적인 중국인 이민의 급증과 국경무역의 번성은 중국의 팽창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우려가 되고 있다. 일·러간에도 북방도서문제는 미 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다. 중·일간에는 첨각열도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간의 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남사군도 및 서사군도 수역을 중심으로 하여 해상교통로와 해저자원을 둘러싼 양국간 경쟁과 대립도 잠재적인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잠재적 분쟁 요인들은 역내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군사력 증강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인해 점차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해상에서의 경쟁·대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에너지 자원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수요가 급속히 촉발됨에 따라 해저자원의 개발 및 확보 노력이 대폭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른 ‘국가영역의 신 개념’의 대두로 더욱 강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역내 국가들은 해군력 증강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는 결국 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이 재양극화(re-polarization)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중관계 악화될 경우 미국은 미·일동맹을 강화할 것이고, 중국은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일에 대항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한반도가 자국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기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일한국을 미·일 동맹구조 속에 견고하게 유착시키고자 할 것이며, 중국 역시 대미·일 견제의 일환으로 통일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다섯째, WTO의 역할 및 기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는 이른바 ‘참새떼’모형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역내에서는 물론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경쟁과 이에 따른 마찰을 불가피하게 심화·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나. 역내 국가들의 대통일한국 정책

(1) 미국

미국은 통일한국이 자국과의 연대 하에 또는 영향권 하에 있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통일한국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는 통일한국이 ‘친중국화’되거나 중국과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 동맹관계의 약화 내지는 해체 결과를 초래하여 한반도에 주한미군 및 군사기지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한

편,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국민의 저항을 유발함으로써 결국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 및 영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통일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등장은 북한이라는 한·일 공동의 위협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양국간의 협력적 요소가 약화되는 반면에 한국 내에서의 민족주의 강화와 이에 따른 반일 감정의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갈등적·대립적 요인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와 같은 한·일관계의 악화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유지·강화함으로써 한·일간의 분쟁가능성, 불안감 및 군비경쟁 가능성 등을 억제하는 동시에 양국간 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은 통일한국이 핵무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핵무장화는 일본의 핵무장과 동북아 역내 국가들간 핵군비경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일본

통일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일본의 시각에 의하면 중립한국은 중국과 연합하여 반일본 노선을 형성함으로써 일본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미동맹의 약화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군 또는 완전 철수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일본 내 미군주둔에 대한 일본 국내의 정치적 지지를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일본

의 안보태세를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대폭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통일한국이 한·미동맹의 유지와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속 허용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첩되는 통일한국과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공조노력을 통해 미·일 안보협력체제와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부분적으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본은 통일한국이 경제적으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우려하는 반면에 한반도 통일시 한국경제의 혼란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통일한국의 북한지역 경제 재건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재정적 투자 및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3) 중국

중국은 강대국이 한국과의 국경지역에 군사적으로 주둔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기피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가장 큰 관심은 한·미동맹의 지속 여부와 주한미군의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통일한국이 중립을 표방하거나 안보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이는 중·일관계의 악화도 초래할 것이고 통일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의 일원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양상을 띠는 것을 우려하여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도록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만한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리

고 미·중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강력히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바, 주한미군의 철수가 일본의 역내 영향력 증대라는 중국이 바라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중국은 통일한국의 북부지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은 연변자치구의 약 100만명에 달하는 한국인들 사이에 민족주의가 고조되어 한국 주도하에 통일된 한국과 일체감을 갖게 되는 것을 우려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이 통일 직후 국경문제를 제기하였듯이 통일한국도 국경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4) 러시아

러시아가 통일한국에 대해 갖는 가장 큰 관심은 한반도의 비핵화일 것인 바, 통일한국의 핵무장화는 일본의 핵무장을 야기함으로써 러시아의 국익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시 대량의 탈북 난민이 연해주 지역으로 유입되어 이 지역의 민족구성에 변화를 초래하여 중앙정부와의 경제적·문화적 결속이 이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한미군의 통일한국 주둔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접경지역 인근에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과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통일한국 주둔에 대해 중국보다는 타협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러시아는 통일한국이 특정 국가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는 것을 가능한 한 견제하는 차원에서 통일한국이 포함되

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과 역할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국가와 공동으로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자국 영토 내의 풍부한 자원에 대한 개발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된 한반도는 러시아가 동아시아내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및 발전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는 통일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지위를 제고하고자 할 것이다.

3. 통일한국의 상대적 위상

가. 경제적 위상

한반도 통일의 후유증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에도 2020년경 주변 강대국들의 경제 규모는 통일한국의 적게는 5배에서 최대 15배 이상 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한반도 통일비용은 통일시기 및 방법, 통일비용의 개념, 통합단계에서의 남북한 발전수준 등에 대한 상이한 가정으로 인하여 최소 400억 달러에서 최고 1조 8천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막대한 비용이 요구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와 같은 통일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주변 강대국들의 경제성장을 감안하면, 통일한국의 상대적 경제력은 장기적인 통일의 시너지 효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상당기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군사적 위상

현재 한국은 병력 규모 및 국방비의 측면에서 세계 10위권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주변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상당한 열세에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은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통한 질적 개선과 첨단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증강 계획 및 과학기술 능력, 현재 세계 28위 수준(선진국의 50~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 능력, 특히 군사과학기술은 주로 모방개발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한국이 군사적으로 주변 강대국들과 대등한 위치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 통일한국의 안보위협 평가

가. 역내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협

2015년경의 동북아 안보질서는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강대국들로 구성되는 이른바 ‘비대칭적 다극화’ 구조하에서 미국이 균형자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유동성은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유동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역내 역학관계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통일한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중국이 역내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미국은 역내 기득권을 유

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경우이다. 이 경우 미국은 미·일동맹을 강화할 것이고, 다른 한편 중국은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구축하여 미·일에 대항할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어 역내에서의 긴장고조는 물론 군사적 충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양측 공히 통일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인 바, 통일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한국이 어느 일방과 협력할 경우 다른 일방과는 적대관계를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미국이 동북아 정책을 비개입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역내의 세력공백으로 인해 중·일간 패권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동북아 비개입 정책은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의 해체를 의미하는 바,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대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과의 격렬한 패권경쟁을 초래함으로써 역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미국이 통일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약화 내지 해체하는 경우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는 일본과의 동맹, 그리고 유럽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와의 동맹관계 유지만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한·미 동맹관계를 파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 통일로 인해 한·미 양국 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에도 양국간 동맹관계의 유지를 재고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대폭 증대되고, 한·일간 분쟁의 발생·격화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역사적으로 한국보다는 일본을 중시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한국은 미국의 지원 또는 중재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넷째, 통일한국의 등장은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보다 더욱 중요

한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역내에서 통일한국의 영향력이 대폭 증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세력경쟁을 전개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음을 뜻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세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통일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나. 해양안보에 대한 위협 고조

해양안보에 대한 위협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운송의 대부분은 해상교통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의 의존도는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일로 인해 인구가 대폭 증가됨에 따른 곡물 수요와 북한지역 경제를 재건하는데 요구되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북한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활용 가능한 광물자원의 종류와 양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안보에 대한 위협의 고조는 통일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 불특정 안보위협이 증대

정보혁명에 따른 새로운 안보위협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주체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과 이들 주체가 ‘비대칭적 전략’(asymmetric strategies)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복합적 분쟁 또는 중강도 분쟁, 저강도 분쟁, 전쟁이외의 군사작전(OOTW: Operations Other Than War), 대량살상무기 등을 이용한 비대칭적 위협, 그리고 정보전 등의 조합이 향후 10~15년간 주요 위협 수단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통일한국은 최근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위협과 우주 및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하는 전장영역의 확장 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한 불특정 안보위협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라. 군사 후진국으로서의 위상 고착화 가능성 증대

향후 국제 군사질서는 주변 강대국 및 서유럽 등 소수의 기술 및 경제 선진국들에 의한 과독점체제로 정착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이들 국가들이 후발 국가들의 추격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발 국가들은 자체적인 능력으로 첨단무기와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한, 선진 강국들과 대등한 수준의 전력이나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항구적인 열세에 놓이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경제적 및 군사적 위상을 고려할 때, 군사혁신의 성과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상당 기간 군사 후진국의 위상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마. 국내 안보인식 저하에 따른 국방비 삭감 압력 증대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국 국민의 안보의식은 상당 수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통일은 북한이라는 최대의 현존 안보위협이 소멸을 의미하는 반면에 불특정 위협의 특성상 이에 대비해야 할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의 후유증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대폭 증대될 것이라는 사실도 안보의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비를 삭감하여 보다 많은 재원을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제, 과학·기술 및 사회복지 등을 위해 할당해야 된다는 압력이 증대될 것이며, 이는 결국 통일한국이 확보해야 하는 국방력의 달성을 제약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 통일한국의 안보정책 추진방향

가. 동맹 형성을 기축으로 한 안보 확보

통일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안보정책 노선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맹관계의 구축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중립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세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한국의 중립화에 대해 합의·보장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미국이 동북아 정책을 고립주의로 전환할 경우에는 여타 주변 강대국들 간의 세력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간 통일한국의 중립화에 대한 합의·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이 전략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국력의 확보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통일한국이 전략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변 국가들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

력의 유지가 요구된다. 그런데 통일한국이 이들 국가들과 대등한 군사력의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 및 군사과학기술 능력 등을 보유하는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독립은 통일한국이 가장 선호하는 안보 확보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하겠다.

한편 통일한국이 동맹관계의 구축을 통해 안보를 확보할 경우 어느 국가를 동맹의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시점에서는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동맹 대상국의 선정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이 동북아에서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일본이 주요한 군사적 위협으로 등장할 경우, 또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상황 등을 상정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통일한국은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동맹관계 형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한·미동맹의 성격 및 역할 변화 추진

통일한국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어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를 목적으로 유지되어온 한·미동맹은 통일한국의 등장에 따른 상황의 변화에 적합한 성격과 역할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미동맹의 기본 성격은 통일한국의 안보를 지원하되, 특정 국가를 적대국으로 상정하지 않고 지역안보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우선적으로 주한미군의 병력구조와 주둔 위

치의 변화를 요구한다.

둘째,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전망되나,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주요 해상교통로가 위치하고 있는 해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방어를 주목적으로 하는 한·미동맹은 이와 같은 불특정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형태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한미군의 병력구조가 변화되어야 하는 바, 해·공군병력을 중심으로 최소 병력의 지상군을 주둔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주둔지를 한반도의 남부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실질적으로 대등한 동반자 관계의 동맹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한반도 통일로 인해 북한이라는 군사적 위협이 소멸될 경우 통일 한국 내에서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개정 내지는 파기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한 조항을 조속히 개정하여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미감정을 억제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한국이 독자적 군사지휘체제 하에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역내 문제에 대해 협의·협조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적극 추진

통일한국이 한·미동맹의 유지만으로 안보를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최근 증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불특정 위협에

대한 대처, 해양안보 확보 및 역내의 군비통제 등은 다국간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 여건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소규모의 지역분쟁 및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과 함께 평화유지활동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다국적 작전(multinational operations)의 필요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9.11 테러사태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중국과 러시아가 대테러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협력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하겠다.

둘째,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형성에 대해 소극적 내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미국, 중국 및 일본이 협력체의 형성에 찬동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95년의 제2차 EASR과 1998년의 제3차 EASR 보고서는 기존의 안보동맹을 유지하고 다자간 안보협력도 점차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국제기구 또는 다자간 협정 등은 미국의 국익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다자간 안보협력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미국이 단독으로 모든 분야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미국의 입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역시 최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한국정부의 '동북아 6개국 선언'에 조응하여 1998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6자회담'을 제안하였고, 현재 한국과 함께 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과 관련하여 일부 원칙을 제시

하고 있으나, 협력체 논의에 적극 찬동·참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2001년 11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10+3'(아세안+한, 중,일)회의시, 주룽지 총리는 “당장 테러주의, 마약 조직, 불법 이민 등 다국적 범죄활동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어,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적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요인이 되고 있다. 정치 및 안보 부분의 대화가 이러한 영역을 포함하여, 협력의 내용을 확대·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와 같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늦어도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시기에는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한국은 국제 평화유지 및 평화창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신뢰와 전략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양자간 동맹과의 상호보완적 전략, 단계별·포괄적 접근전략, 그리고 점차 광역적인 안보문제와의 연계, 즉 동아시아 및 아·태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와의 연계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수행함으로써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라. 양자간 안보협력 증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통일한국이 주변국과 양자간 갈등 및 대립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자간 갈등과 대립은 다자간 협의에 의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안에 따라 양자간의 해결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양자간 갈등의 발생과 군사적 충돌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군사·안보적 압력을 해소 내지는 완화시키는 한편,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구축을 촉진

시키는 수단의 측면에서 양자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유지는 통일한국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안보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국민적 감정 및 한·미·일간의 군사적 결속에 민감한 중국의 입장 등이 한·일 안보협력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들 제약요인을 극복하여 일·중·러와의 안보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반도 가교론’, ‘중추적 동반자론’ 및 ‘동북아 허리론’ 등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입각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 통일한국에 적합한 군사혁신 추진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정보화 시대의 도래, 불확실하고 불특정한 안보위협이 증대 등은 미래의 전쟁 패러다임을 정밀타격·정보마비 전 양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선두로 주변국들 모두 새로운 군사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은 한국 역시 군사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당위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통일한국의 능력과 환경 여건에 적합한 군사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통일한국은 최근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위협과 전장영역의 확장 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한 비대칭적 안보위협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이들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비대칭전략과 전력의 발전에 입각하여 군사혁신을 추구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곧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혁신을 모방하기보다는 한국에 적합한 독자적인 군사혁신의 개념과 방안을 연구·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혁신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군사혁신 방안을 강구·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보·기술군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식별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즉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투자·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원형(prototype)까지만 개발하고 필요시 즉시 양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요구되는 반면에 전투력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군사교리·전략, 조직편성, 지휘체계, 군내 인적 자원의 자질 향상 등의 무형전력 분야를 새롭게 정립하고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군사혁신은 기존의 군의 규모, 구조, 특성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이 경우 한국의 통합전투력 유지 및 발휘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인 바, 군사혁신은 군간 합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군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운영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인해 미래형 국방태세로의 전환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사혁신은 그 특성상 10~1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한된 국방재원을 미래전력 건설을 위한 투자에 과도하게 할당할 경우 기존 전력, 즉 대북 억제 및 방어 전력의 약화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혁신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고려하여 치밀한 계획 하에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 목 차 -

I. 서 론	1
II. 국가안보의 개념: 이론적 고찰	4
1. 국가안보 개념의 다양성	4
2. 통일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7
III. 통일한국의 안보환경	10
1. 동북아 안보질서	10
가. 역내 국가들의 동북아 정책	12
나. 주요 주변국 관계	21
다. 동북아 안보질서의 특징	32
2. 역내 국가들의 대통일한국 정책	35
가. 미국	35
나. 일본	37
다. 중국	39
라. 러시아	40
IV. 통일한국의 위상 및 안보위협	43
1. 통일한국의 상대적 위상	43
가. 경제적 위상	43
나. 군사적 위상	45
2. 통일한국의 안보위협 평가	49
가. 역내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협	49
나. 해양안보에 대한 위협 고조	52

다. 불특정 안보위협의 증대	53
라. 군사 후진국으로서의 위상 고착화 가능성 증대	56
마. 국내 안보인식 저하에 따른 국방비 삭감 압력 증대 ..	56
V. 통일한국의 안보정책 추진방향	58
1. 동맹 형성을 기축으로 한 안보 확보	58
2. 한·미동맹의 성격 및 역할 변화 추진	62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적극 추진	65
4. 양자간 안보협력 증진	68
5. 통일한국에 적합한 군사혁신 추진	69
VI. 결 론	73
참 고 문 헌	76

- 표 목 차 -

<표 1> 주변국 국방비 비교	46
<표 2> 동북아 각국의 전력증강 계획(2005년 기준)	46
<표 3> 정보화시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54
<표 4> 한국군의 군사혁신 모색	69

I. 서론

통일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기반을 구축하여 통일을 이룩할 것이며 통일한국을 여하히 건설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은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전략적 과제를 제기할 것인 바, 이는 통일한국의 등장이 동북아 전략환경과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통일한국이 취하게 될 안보정책은 역내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일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우선 국가안보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통일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통일한국의 안보정책은 통일시점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수립·추진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동북아의 안보구조와 역내국가들의 통일한국에 대한 정책을 분석·전망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한국의 상대적 위상과 안보위협을 평가하고 이들 분석 및 전망을 토대로 통일한국의 안보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일한국이 안보차원에서 직면하게 될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동시에 통일한국의 안보정책방향을 미리 주변 국가들에게 알림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한국만이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한반도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통일한국의

2 통일한국의 안보정책방향

국가능력 및 위상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관계나 동북아 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통일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정복함으로써 이루어질 경우에는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이며, 한·미 안보유대는 보다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 또는 남북협상에 의해 합의된 형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은 감소되고 이에 따라 한·미 안보관계 역시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을 분석·제시하기 위해서는 통일시기와 방식에 따른 시나리오별 접근방법¹⁾ 또는 통일시기와 방식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한 접근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접근방법, 즉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통일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통일시기는 2010~2015년경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정한다. 통일시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일과정에서 많은 돌발적인 변수들도 작용할 수 있어 이를 모두 감안하여 검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미 전문가들의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0년경의 통일 가능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
- 1) 한반도의 통일방식에 따른 시나리오별 접근과 관련하여서는 Jonathan Pollack and Chung Min Lee,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Scenarios and Implications* (Santa Monica, CA: RAND, 1999); William Taylor, Jr. et al, *Great Power Interests in Korea Reunification* (Washington, D.C.: CSIS, 1998); Kyongsoo Lho and Kay Moller(eds.), *Northeast Asia Toward 2000: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1999) 등을 참조 바람.
 - 2) 옥태환·김수암, 「통일한국의 위상」,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또한 Robert Dujarric도 2010년에 한반도 통일 또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태는 단기기간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통일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남한 주도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전하고 시장경제의 세계질서에 역행하지 않는 방식의 통일로 설정한다. 이는 남북한간의 국력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현실적으로 북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이에 따라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제한다.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Robert Dujarric, *Korean Unification and After: The Challenge for U.S. Strategy* (Indianapolis: Hudson Institute, 2000), pp. 1~4를 참조 바람.

II. 국가안보의 개념: 이론적 고찰

1. 국가안보 개념의 다양성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국제정치학자들의 관심 영역으로 연구되어 왔는 바, 국가간의 군사, 외교적 갈등, 전쟁, 세력균형, 동맹, 집단안전보장 등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보위협과 대응수단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국가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적이고 보편 타당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절에서는 그간 논의되어 온 다양한 국가안보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협의의 국가안보 개념은 주로 현실주의적 학자들의 견해로서 국가이익은 생존(survival), 번영(prosperity), 그리고 위신(prestige)이라는 가치의 순으로 위계질서가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국가안보의 최우선적인 역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Kenneth Waltz는 무정부적(anarchical)인 국제체제에서 안보는 국가의 존립 이유이자 국가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다.³⁾ 따라서 협의의 국가안보 개념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군사안보 논리를 국가안보의 중심개념으로 간주, 국가의 안보를 주로 국경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⁴⁾ 뿐만 아니라 비록 탈냉전 시대의 도래가 군사안보의 중요성을

3)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 note 1, p. 126.

4) Joseph S. Nye and Sean M. Lynn-Jones,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 Report of a Conference on the State of the Field,"

약화시키기는 하였지만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안보환경 하에서 영토와 주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력, 특히 군사력을 신장하고 효율적인 전략, 전술을 수립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신축성 있는 외교·국방정책을 전개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군사적 측면에 한정시키고 있다.

이와는 달리 광의의 국가안보 개념은 Klaus Knorr의 “한 국가의 핵심적 가치나 이익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맥락에서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 것”⁵⁾이라는 주장과 다음과 같은 탈냉전기의 국제질서 변화에 주목하면서 국가안보의 다원적·복합적 성격을 강조한다.⁶⁾

첫째, 탈냉전기에 들어서서 국가안보 개념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안보개념에 추가하여 경제, 자원·환경, 사회문제 등 비군사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즉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과거에는 주로 군사적인 위협에 국한되었으나, 탈냉전시대에 들어서는 무역 및 경제동향, 국제 에너지문제, 식량위기, 마약, 테러,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둘째, 국가안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안보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국가의 안보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통과 통신의 급속한 발달, 국경을 초월한 다국적기업의 활동,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 등으로 국경의 의미가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 개인,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등 국경을

International Security, Vol. 12, No. 4 (Spring 1988), pp. 5~27.

5) Klaus Knorr and Frank N. Trager eds., *Economic Issues and National Security*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7), p. 8.

6) 다음의 논의는 Robert Mandel, *The Changing Face of National Security: A Conceptual Analysis*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94)을 참조하였음.

초월하여 활동하는 행위자들의 수적 증가와 이들의 역할이 증대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며 국가의 영토내 영향력 또한 감소될 것이다. 이는 곧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보 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면서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 안보의 관심 대상이 상대국의 외교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까지 확대됨을 의미하며, 자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외문제와 국내상황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안보문제를 다루기가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냉전시기에는 적대국과 우호국의 구분이 명확하였으나, 냉전적 이념 대립이 소멸됨에 따라 적과 우군의 구분이 모호해짐으로 인해서 타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예컨대 경제적으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념적으로 적대관계를 유지하던가 또는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대립 또는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Robert Mandel은 국가안보란 “일반적으로 국가정부의 책임으로써 국가 및 시민의 핵심적 가치가 대내외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여 심리적(psychological)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안정(physical safety)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⁷⁾ 여기서 ‘핵심적 가치’란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시민 차원에서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생존 및 주권보호, 번영과 발전, 대외적 국가위상 제고, 국

7) Robert Mandel, *The Changing Face of National Security: A Conceptual Analysis*, p. 21.

내적인 가치와 체제의 보존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문정인 교수는 탈냉전기의 국가안보를 군사안보, 경제안보, 생태적 안보(ecological security), 사회안보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⁸⁾

요컨대 광의의 개념의 국가안보는 국제질서라는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가안보의 위협요인이 변화되고, 이에 따라 대응방식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안보는 군사, 비군사에 걸친 대내외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가목표와 국가가 추구하는 제 가치를 보존,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⁹⁾

2. 통일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합의

상기의 논의를 통해 통일한국의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가안보의 개념을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Arnold Wolfers가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안보개념 자체는 절대적일 수 없고 그 국가가 처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모호한 상징’(ambiguous symbol)이기 때문이다.¹⁰⁾ 즉 본래 안보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개별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특수한 여

8)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문정인, “국가안보와 국가정보: 바람직한 정보기구 모색을 위하여,”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2권 1호 (경기도 성남: 세종연구소, 1996), pp. 41~42를 참조 바람.

9) 최경락, 정준호, 황병무 (공저), 『국가안전보장 서론: 존립과 발전을 위한 대전략』 (서울: 법문사, 1989), p. 26; 박휘락, 『한국안보전략연구』 (서울: 법문사, 1993). 홍관희, 『남북관계의 확대와 한국의 국가안보』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2에서 재인용.

10) Arnold Wolfers, *Discord and Collaboration: Essays on International Polit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2), p. 147.

건에 따라서 안보의 개념, 범위,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Hugh MacDonald는 안보를 ‘부적절한 개념’이라고 결론짓고 안보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를 포기한 바 있으며, Barry Buzan도 국가안보를 일종의 ‘저개발된 개념’(underdeveloped concept)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¹¹⁾ 따라서 안보환경의 특수성과 안보개념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화된 국가안보의 개념을 모든 국가에 적용할 경우에는 무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통일한국의 경우에도 통일한국이 처할 특수한 안보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안보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둘째, 안보는 개인, 사회, 국가, 국제체제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문제이며,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함께 군사는 물론 정치, 경제, 자원, 환경, 생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안보의 개념이 군사안보로부터 비군사안보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보요소가 다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요소들은 상호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안보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파악,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보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셋째, 안보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한정된 자원, 즉 예산과 인원 등을 어떻게 활용하여 추구하는 목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안보 목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정책을 수립·추진해

11) Hugh MacDonald, "The Place of Strategy and the Idea of Security," *Millennium*, vol. 10, no. 3 (1981); Barry Buzan,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1991).

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안보정책은 군사안보와 비군사안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구상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안보요소들을 동시에 동등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경우에도 통일에 따른 안보요소들의 변화를 고려하되, 안보위협을 주체, 대상, 긴박성 등을 신중히 평가하여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인원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방향으로 안보정책을 입안·추진하여야 한다.

Ⅲ. 통일한국의 안보환경

1. 동북아 안보질서

현시점에서 10여년 후의 동북아 안보환경을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바, 이는 많은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제관계를 보는 분석 틀에 따라 다양한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동북아 안보환경을 예측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노력들은 특정 국제정치이론을 적용하거나, 많은 가정을 전제로 분석하거나, 또는 일부 변수들만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접근방식 등을 택하고 있다. 예컨대 강원식 교수는 패권이론을 적용하여 향후 동북아 질서는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동북아지역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향력을 지속하고,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역내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러시아와 함께 역내 세력균형을 이루는 방향, 즉 「1+3체제」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이를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Pax Consortia) 체제」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북아 팍스콘소티아」라고 부르고 있다.¹²⁾ 이태환 박사는 중국과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전망과 중국의 전망을 중심으로 2010~15년경의 동북아 질서는 미국의 헤게모니 체제이든 미국 우위하의 다극적 체제이든 두 가지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이 교차되는 전환기일 수도 있으나 군사적으로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갖고 중·일·러는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 또는 동맹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³⁾ 한편 김우상 교수 역시 21세기 동북아 안보질서를 전망하는데

12)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강원식, 「통일한국의 등장에 따른 동북아 안보구조 변화 대응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를 참조 바람.

있어 중국과 미국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중국 변수와 미국 변수를 바탕으로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패권안정(hegemonic stability)」, 「편승(bandwagoning)」,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등의 네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있다.¹⁴⁾ 또한 김기정 교수는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도라는 한 축과 한반도 상황변화라는 다른 하나의 축을 고려하여 「안정적 동북아 질서와 분단한국」, 「안정적 동북아 질서와 통일한국」, 「불안정한 동북아 질서와 분단한국」, 「불안정한 동북아 질서와 통일한국」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¹⁵⁾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접근방식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연구결과를 참고하되,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동북아정책과 상호관계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시의 동북아 안보질서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동북아 안보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 예컨대 역내 국가들의 군사동향, 역량 및 태세, 지역 세력균형, 전략적 상호관계, 국내적 상황 등의 변수들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13) 이태환, “통일한국의 안보외교: 주변 4강 외교를 중심으로,” 이태환 편,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전망과 대책」 (경기도 성남: 세종연구소, 1999), pp. 25~72.

14) 김우상, “미·중 대결구도하 한국의 안보전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2001 제Ⅷ권 제2호, pp. 72~105.

15) 김기정,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비교검토,”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서울: 법문사, 1998), pp. 592~614.

가. 역내 국가들의 동북아 정책

(1) 미국

최근 미국의 동북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정책은 포괄적인 개입 및 확장 정책으로 요약되며,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 목표, 즉 역내에서의 패권세력 등장은 물론 지역 강대국간의 패권경쟁 가능성까지도 방지하는 한편, 동북아 나아가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이익 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자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향후 아시아 지역의 정세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금년 9월 30일 미의회에 제출된 미래의 국방전략 및 정책을 검토한 『4개년 국방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는 향후 아시아 지역의 안보추세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가까운 장래에 대등한 경쟁자와 마주 대하지는 않겠으나, 지역 국가들은 미국의 중대한 이익이 걸린 지역의 안정을 위협할만한 충분한 능력을 개발할 잠재력이 있다. 특히 아시아는 대규모 군사적 경쟁에 휘말리기 쉬운 지역이다. 아시아에서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복잡한 과제가 될 것이다. 거대한 자원 기지를 보유한 군사적 경쟁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¹⁶⁾

특히 미국은 최근 급속한 국력신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잠

16)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September 30, 2001, p. 4.

재적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향후 중국이 현재 미국주도의 동북아 질서에 도전하는 현상타과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견제와 대응을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최대 관심사로 간주하고 있다.¹⁷⁾

이와 같은 지역정세에 대한 전망에 따라 미국은 상기한 동북아에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 역내 동맹국들과의 양자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의 역할 증대를 유도하고자 할 것인 바,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일본을 대상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1999년 5월 의회에서 3개 법안으로 구성된 ‘신방위협력지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중 ‘주변사태법안’은 일본의 주변지역에서 무력분쟁 등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과 부상당한 미군의 수색·구조활동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들의 지원업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자위권 활동을 제한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¹⁸⁾ 이와 관련, 2000년 10월 미 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의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라는 보고서의 다음과 같은 주요 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⁹⁾

17)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에 분석·전망되는 미·중관계를 참조 바람.

18) 전인영, “동북아 군사정세 전망과 한국의 안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2001 국방비관련 학술세미나 논문집, p. 14.

19) 신지호, “일본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통일,” 북한연구학회 주최 2001년도 동계학술회의(2001년 11월 24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질서의 변화: 남북한의 변화와 주변국의 대응』 발표 논문, pp. 9~11에서 일부 재인용.

- 미·일 안보동맹이 미국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중심에 놓여야 함.
- 미국과 영국간의 특별한 관계를 미·일동맹의 모델로 삼아야 함.
-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통한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를 제안함.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를 해제시키는 것이 보다 긴밀한 안보협력을 가능케 할 것임.
- 정보협력도 미·나토 수준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야 함.

또한 미국무부 장관 Richard Armitage는 2001년 5월 9일 방일시 일본이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는 전제하에 일본의 한정된 군사력 확충을 장려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조성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⁰⁾ 따라서 향후 미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특히 미·일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자 할 것이며,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미·일 동맹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동맹관계의 약화와 이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향후 동북아 국가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제성장, 군사력 증강, 그리고 외교·안보정책의 자주성 추구 등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기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주둔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상당한 수준으로 해외주둔군의 주둔지를 변경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동남아와 호주를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택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를 아시아지역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²¹⁾ 이러한 맥락에서 클린턴 행정부에서 동아태

20)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9 May 2001.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Kurt M. Campbell은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지원하고 동남아시아에 패권국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시아 주둔 미 군사력을 한반도와 일본의 아래쪽으로 이동 해야한다,” “동남아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 아시아 전체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²²⁾

아울러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지역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과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및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통해 자국의 안보역할 축소를 보완함으로써 중국 또는 일본의 지역패권 경쟁을 저지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²³⁾

(2) 중국

중국은 경제건설, 사회안정 도모, 대만문제 해결 등을 21세기의 핵심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외부 환경조성을 대외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5개 국가와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 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건설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창출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평화와 안정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국은 대만문제 해결과 강대국 지위의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²⁴⁾

2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한·미동맹/주한미군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01-05(2001. 5), p. 5.

22)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한·미동맹/주한미군 변화에 대한 대응』, p. 5.

23) 고대원, “탈냉전 이후 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와 군사력 변화양상,” 김달중·문정인·이석수 외, 『새천년 한반도 평화구축과 신지역질서론』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p. 218.

중국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자국의 부상을 봉쇄하려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중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국 내에서 소위 ‘중국 위협론’이 확산될 경우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일간 또는 한·미·일간 대중국 연합전선이 구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중국은 미국과 이해를 달리하거나 미국 노선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반미연합전선’의 구축을 적극 고려할 것이다.²⁵⁾ 그러나 1999년 후반과 2000년 초반에 수행되고 향후 20년을 상정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분석은 미국이 적어도 향후 20년 동안은 유일한 초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⁶⁾ 또한 대부분의 중국 안보전문가들도 2020~2030년이 되어야 중국의 종합국력이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²⁷⁾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국력이 미국에 미치지

24) 신상진,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중국,” 세종연구소,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제4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2000년 4월 20~21일), pp. 43~44.

25) 박선섭, “중국이 보는 미래의 세계 안보환경,” 한국국방연구원, 『주간 국방논단』 제807호(00-14), 2000. 5. 1, p. 12. 박선섭 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Michael Pillsbury 박사가 저술한 『중국의 미래 안보환경에 대한 변론』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는 바, 이 책은 Pillsbury 박사가 중국의 등장이 세계안보질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1944~1999년간 중국의 안보전문가들이 저술한 200권 이상의 서적으로부터 600건 이상의 인용과 100명 이상의 저자와의 직접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술한 것으로서 특히 저자의 해설을 곁들이지 않고 중국 안보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보관을 소상하고 진술하게 기술하고 있다.

26) 맥테밋, “동북아의 안보 도전과 안보질서 구축,”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 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1), p. 63.

27) 박선섭, “중국이 보는 미래의 세계 안보환경,” p. 3. Landall Forsberg도 현재 추세라면 중국이 30년 내에 군사적 강대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고품질 금속 또는 우수한 엔진 등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미국과 경쟁 속에서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와 앞으로 봉착하게 될 많은 국내 문제들, 예컨대 개혁·개방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지역간 및 계층간의 불균형한 경제발전과 분배, 자유주의 사조와 유입 등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능력을 함양하는데 전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정책이 곧 중국이 동북아에서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중국은 이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만의 독립을 방지하여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예컨대 역내 국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을 계속 추진할 것인 바, 2010년경에 고체연료에 의존하는 정밀유도장치를 장착한 매우 정확한 MIRV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등 2015년경에는 원거리 투사 능력과 장기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⁸⁾ 또한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MD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은 향후에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의 MD의 확충은 미국과 일본의 대중 봉쇄를 강화하고, 특히 한국과 대만이 참여할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정치, 군사협력체제를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패권 유지를 공고화 내지 장기

을 생산할 수 있는 자체 기술력이 부족하고, 군사력의 현대화가 매우 느리게 진행 중이며, 군수산업이 미발달하였고, 러시아의 선별적 수출 및 서구 국가들의 두려움과 거부감 등으로 인해 신무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국의 시각에서 보는 한미동맹/동북아 평화를 위한 정책과 전망』,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01-06(2001. 6. 28), p. 6.

28)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규열·구분학·김광식·김해진, 『중장기 위협 평가 및 국가 안보 전략』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0), pp. 23~25를 참조 바람.

화하는 것으로, 그리고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⁹⁾

한편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지속과 도시화 추세로 인해 10~15년 후에 심각한 인구문제와 자원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³⁰⁾ 따라서 중국은 시베리아, 극동, 몽고, 동남아시아의 영토와 자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이는 관련 당사국들과의 갈등을 유발·고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3) 일본

1990년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은 다음과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³¹⁾ 첫째, PKO참여를 통한 자위대의 해외파견이다. 1992년 6월 유엔 PKO협력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이래 자위대의 PKO부대는 캄보디아, 무잠비크, 자이레, 골란 고원 등에 파견되어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바, 이는 일본 안보정책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일본은 1995년 12월에 책정된 신방위대강을 통해 방위력의 역할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위대는 일본방위 뿐만 아니라 재해 등 각종 사태에 대응하고 보다 안정된 안보환경을 구축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미·일 신안보선언에서 미·일 안보

29) 황병무, “탈냉전시대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전망,”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동북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우리군의 발전방향』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 p. 7.

30) 가례예프, “아태지역 안보 강화 및 한방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강대국의 역할,”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p. 200.

31) 이원덕,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일본,” 세종연구소,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제4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2000년 4월 20~21일), pp. 61~62.

체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긴밀한 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발판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일본은 극동 유사시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사상황이 전개될 경우 미군의 작전에 적극적인 협력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안보정책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금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뉴욕시의 세계무역센터와 미국 국방성에 대한 테러 공격 직후인 10월 29일 비록 2년간의 한시법이기도 하지만 ‘테러 대책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합법화하고,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테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 함정 3척을 인도양에 파견하였다.

그런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와 같은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에는 미국의 요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바, 이는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가 미·일 안보체제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미·일 안보체제의 틀 안에서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대미 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을 증액시키는 일본의 안보정책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³²⁾ 이는 무엇보다도 일본 특유의 사회적 및 법적 규범 등 내부 요인과 함께 미·일 안보체제 자체가 일본의 ‘정상적인 강대국’(normal great power)³³⁾화와 이에 따른 군사대국화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⁴⁾

32) 일본의 2001년 방위백서는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목표를 하이테크 전쟁대비, 미일안보체제 강화, 세계 평화유지활동 확대 등으로 요약하고, 이를 위해 군장비를 보다 현대화하고 경계 감시 능력과 정보통신 능력을 높이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Japan Defense Agency, *Defense of Japan 2001 White Paper(Summary)* (<http://www.jda.go.jp/e/wp2001>).

33) 일본의 ‘정상적인 강대국’화에 대해서는, 에컨대 Edwin P. Hoyt, *The Militarists: The Rise of Japanese Militarism since WWII* (New York: Fine, 1985)를 참조 바람.

34) 미국이 미·일 안보체제를 대일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정호섭, 『해양력과 미·일 안보관계: 미국의 대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이 증대되고, 반면에 미국의 역할이 축소될 경우 일본은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이른바 ‘정상적인 강대국’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와 관련, 2001년 5월 일본에서 2020년을 상정해 작성된 『안전보장에 관한 보고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 보고서는 동아시아를 ‘국가간 경쟁의식이 강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민족주의가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이 최고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나라로 중국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동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하여 “통일 후에는 해병대와 공군중심의 기동부대로 재편이 예상되며, 이 경우 미·일 안보동맹의 재검토가 필요해 진다”고 평가하고 있다.³⁵⁾

요컨대 일본이 독자적으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여 동북아 질서의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나, 일본의 최대 잠재 위협국인 중국과 최대 후원국인 미국의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는 일본 안보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4) 러시아

러시아가 가까운 장래에 역내 국가들의 안보정책 및 역내 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안보정책의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산적한 국내 문제와 구소연방 지역문제의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가 이러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경우에는 기술력과 막대한 자연자원, 그리고 군사혁신 능

일 통제수단으로서의 본질』,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을 참조 바람.

35) 『조선일보』, 2001. 8. 23.

력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종합국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통일한국의 등장 시점인 2010~2015년경에 러시아가 미국주도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동북아 질서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최근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하여 역내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역내 문제의 논의와 해결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책방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역내에서의 군비증강,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전반적인 군사력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극동군사력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간 및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해 신뢰구축 및 군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³⁶⁾

나. 주요 주변국 관계³⁷⁾

(1) 미·중관계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포용’(engage-

36) 고대원, “탈냉전 이후 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와 군사력 변화양상,” pp. 218~219.

37) 러시아와의 양자관계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는 바,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북아 질서 형성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 및 영향은 상당기간 동안 미국,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다음의 ‘다자간 협력 및 갈등관계’와 ‘동북아 안보질서의 특징’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이다.

ment)과 ‘봉쇄’(containment)의 두 가지 견해로 대별할 수 있다.³⁸⁾

우선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견해³⁹⁾는 세계 권력 중심의 다극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 증대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중국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적 ‘이기화’ 및 ‘국제화’가 중국에 대한 강제로 작용함으로써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Landall Forsberg는 중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협력적 안보체제를 추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중국을 태평양지역의 협력적 안보체제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⁴⁰⁾ 또한 서주석 박사도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외면하거나 적극적으로 저지할 경우 나타날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과 전면전 위협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하고도 안전한 방법은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타협·화해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제발전에 따른 대내 정치적 조정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선린우호국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다자안보체제의 수립과 함께 ‘친 아시아’ 및 ‘친 중국’적인 지역 동맹체제의 구축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⁴¹⁾

38) 다음의 논의는 이영길, “미중관계의 동향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855호(01-25), 2001. 8. 13을 참조하였음.

39) 미국의 대중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Ezra F. Vogel, ed., *Living with China: U.S.-China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NY: W.W. Norton & Co., 1997); Robert B. Zoelick, “China: What Engagement Should Mean,” *National Interest*, no. 46, Winter 1996-7; Hans Binnendijk and Ronald N. Montaperto, *Strategic Trends in China*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998) 등을 참조 바람.

40)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한·미동맹/주한미군변화에 대한 대응』, p. 6.

한편 봉쇄정책을 지지하는 견해⁴²⁾는 중국의 부상은 미·중간 당면한 갈등 및 경쟁이 미국의 주도과 이익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의미한다는 우려와 함께 포용정책 지지자들이 모색하는 이른바 중국의 대내외 정책에서의 변화가 확실시되기 이전까지는 중국의 영향력 제한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확보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 또는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봉쇄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에 대한 인식변화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있는 현 부시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들 수 있으며, 특히 향후 미국의 신전략은 중국에 대한 압박전선을 아시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⁴³⁾

중국의 경우에도 대미관계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⁴⁴⁾ 즉 중국의 ‘개혁과’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이 앞으로 최소 30년간 초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과 경쟁 속에서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정통파’들은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은 이미 상당 수준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41) 서주석,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미동맹,” 세종연구소,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제4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2000년 4월 20~21일), p. 10.

42)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을 지지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Alastair I. Johnston, “China’s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Behavior 1949-1992: A First Cut at the Data,” *China Quarterly*, no. 153(March 1998); David M. Finkelstein, “China’s National Military Strategy,” James C. Mulvenon and Richard H. Yang, ed., *The People’s Liberation Army in the Information Age*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1999) 등을 참조 바람.

43)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한·미동맹/주한미군변화에 대한 대응』, p.3.

44) 다음의 논의는 박선섭, “중국이 보는 미래의 세계 안보환경”을 참조 하였음.

미국 세력의 하락은 앞으로 10년 내에 현실화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통파’들은 이미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보고, 미국의 중국 봉쇄를 위한 연합전선에 대항하는 역전선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향후 미·중관계는 대만문제 및 미국의 국내 정치상황 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 중국 대사관 피폭 및 정찰기 충돌 사건과 같은 ‘돌발적’인 요인, 그리고 천안문 사태 등과 같은 구조적 및 돌발적 요인들이 혼재되어 발생하는 문제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⁴⁵⁾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미국이 대중 봉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항하여 중국이 ‘정통파’가 주장하는 ‘반미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나아가서 지역패권을 추구할 경우 이는 동북아 안보질서의 근본적인 개편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지역 안보정세는 매우 불안정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양국간 병존하는 경쟁적 및 협력적 요인들 중 전반적인 아시아의 안전 유지, 국제범죄 및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중국 및 주변지역의 환경 피해 축소, 전세계적인 개방무역의 확장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이 양국관계를 주도할 경우에는 동북아 정세 역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금년 9월 11일 발생한 대미국 테러 공격을 계기로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중국이 APEC 정상회담에서 반테러리즘 국제연대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대테러전쟁의 수행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한정적이지만 협력관계를 형성한 사실은 미·중간 협력 분야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45) 이영길, “미중관계의 동향과 전망,” p. 3.

(2) 미·일관계

일본은 종합국력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특유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견고하게 유지·강화하는 것을 최선의 선택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이 스스로 대동북아 및 대일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미국이 군사적 역할을 중심으로 담당하고 일본이 이를 지원하는 구도를 통해 미·일동맹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안보와 역내에서의 위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일동맹은 한·미동맹과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함으로써 동북아는 물론 동아시아에서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긴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계속해서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다.

(3) 중·일관계

중국과 일본간에는 많은 갈등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바, 우선 양국간에는 첨각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과 여러 국가들간의 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해상교통로 및 해저자원 확보를 위요한 이해 갈등 등이 있다. 또한 양국간의 경제마찰도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과 일본 공히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의 증대, 즉 중국의 지역 차원의 원거리 전력투사 능력에 대한 집중적인 강화와 일본의 전력 첨단화와 독자체제 정비 및 군사적 행동반경 확장 등이 같

등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표출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등 역사에 대한 인식 문제들도 양국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간의 갈등·대립은 서로를 보는 시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 일본은 중국이 반드시 지역패권을 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일본에 대해 ①2010년이면 미국과 동등한 종합국력 수준을 달성하고, ②중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억제하며,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나라이며, ③군국주의적인 전략문화를 아직 고수하고 있으며, ④미국 및 러시아와 더불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자원 쟁탈전을 벌이게 될 위험한 나라이며, ⑤미래의 핵무장국이며, 은밀히 군사력을 증강하여 미국과 대등한 군사대국을 추구할 것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⁴⁶⁾

이러한 중·일간의 대립·경쟁관계는 10여년 후에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양국의 국력이 증대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Zbigniew K. Brzezinski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군사강대국의 지위를 추구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적 강대국인 일본과 긴장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⁴⁷⁾ 그러나 미국이 미·일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 내에서 안정자의 역할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중·일간의 경쟁이 심각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중·일관계는 ‘경쟁 속에서의 협력’ 또는 ‘협력 속에서의 견제’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미·일 안보체제는 역설적으로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정책의 추진을 견제하고 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동북아

46) 박선섭, “중국이 보는 미래의 세계 안보환경,” p. 8.

47) Zbigniew K. Brzezinski, *Out of Control: Global Turmoil on the Eve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Scribner's, 1993).

지역에서, 특히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미국의 역할 및 영향력이 감소될 경우, 중국과 일본간 군사적 우위의 확보 또는 지역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근본적인 개편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중·일관계의 향후 전개 방향은 미·중관계와 함께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4) 다자간 협력 및 갈등관계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투명성을 높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역내의 전략적 불확실성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지역에는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협력체가 부재한 상태이다. 다만 역내 국가들은 최근 아·태지역 차원의 기구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포괄적인 안보협력 및 초보적 단계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동북아지역에는 준정부(또는 반정부) 성격의 기구가 있는 정도이다. 예컨대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기구로서는 1994년 7월에 설립되어 현재 남북한을 포함하여 23개국(ASEAN 10개국 및 ASEAN외 참가국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간 공식 협력체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과 1993년 6월에 발족하고 현재 1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반민·반정부』의 기구로 볼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이사회』(CSCAP: Council of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차

원에서는 1993년 10월에 발족하고 현재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이 참여하고 있는「동북아 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가 있으며, 한국 정부가 1994년 5월과 1998년 2월에 각각 제의하였으나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와 「동북아 6자회담」이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역내 국가들간 위협인식의 차이, 동질적 가치의 결여에 따른 다자간 협력 전통의 결여, 미·일·중·러간의 경쟁심 상존 등의 저해요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⁸⁾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 체 구축은 향후 역내 국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경제분야에서의 다자간 관계는 동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역내 무역규모, 투자비율 및 자본교류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⁴⁹⁾ 그런데 경제적 상호의존은 일반적으로 갈등과 협력을 동시에 내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대체로 호혜와 조화의 관계

48)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국가전략·포괄적 안보 전략·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57.

49)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정갑영, “동북아 경제질서의 재편과 상호협력,” 홍철·김원배 편저, 「21세기 한반도 경영전략: 지경학적 접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 1999), pp. 118~122; 안충영, “동북아 지역통합을 위한 전략,” 홍철·김원배 편저, 「21세기 한반도 경영전략: 지경학적 접근」, pp. 187~191; 문정인·배중윤, “아·태 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안보질서: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함의,” 김달중·문정인·이석수 외, 「새천년 한반도 평화구축과 신지역질서론」,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pp. 370~379 등을 참조 바람.

로 이해되어 왔으며, ‘나는 기러기’(flying geese)모델이 일반적인 설명틀로서 인정되고 있었다.⁵⁰⁾ 다시 말해서 과거에 진행되었던 지역적 수준에서의 경제적 노동분업과 그 결과로 인한 경제적 상호의존은 대체로 원만했고, 상호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미국이 역내 경제를 주도하고 일본이 미국의 발전패턴을 따라가며 성장하였으며, 한국과 대만은 이러한 일본의 발전패턴을, 그리고 중국은 다시 한국과 대만의 경험을 따라가는 양상이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일렬로 지도자를 따라가는 형태를 보여주는 ‘나는 기러기’ 모형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면서 생산주기의 속도가 빨라지게 됨에 따라 결국 기존의 지역적 노동분화 양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역내 국가들은 비교우위를 무시한 채 철강 및 섬유 등의 사양산업들을 보호하게 된다. 동시에 컴퓨터, 반도체, 기타 첨단산업 등과 같이 투자가치가 높고 자본 집중적·기술 집중적인 산업으로 이동하려는 산업구조조정 노력을 진행하게 된다. 결국 동북아 지역의 경제질서는 ‘나는 기러기’ 모형보다는 ‘참새 떼’(swarming sparrow) 모형에 더 적합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간, 그리고 역내 국가들간의 무역마찰 확산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WTO의 성공적인 출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자주의적인 입장과는 별도로 쌍무적인 차원에서 역내 국가들에 대해 수시로 비관세 장벽이나 지적 재산권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바, 최근까지도 미국은 일본의 시장개방 문제를, 중국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권 문제를,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TV, 철강, 반도체 등 분야에서의 시장개방과 덤핑문제를 계속해서 제

50) 다음의 논의는 문정인/배종윤, “아·태 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안보 질서: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합의,” pp. 380~381을 참조하였음.

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향후 동북아 지역내 국가들의 경제 발전은 이들간 경제적 상호의존도와 함께 경제적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경쟁은 에너지를 비롯한 해저자원의 확보를 둘러싸고도 치열해 질 것이다. 역내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육상자원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해양에서 대체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해양관할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11월 16일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발효된 이후 세계 150개 연안 국가 중 120여개 국가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선포함으로써 세계 수산 자원의 90%와 해저석유의 90%가 연안국에 귀속되었다.⁵¹⁾ 이에 따라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국가들이 자국에 유리한 해양질서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 국가들간에는 도서영유권 문제, EEZ를 비롯한 각종 해양경계획정 문제, 해양자원 개발 등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잠재하고 있어 향후 당사국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⁵²⁾ 한국과 일본은 1996년에 EEZ를 선포하였으며, 중국도 1998년에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법을 공포하여 한반도 주변국들은 해양법 협약규정의 당사국인 동시에 EEZ에 대한 국제적 해양 관할권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한반도 주변 해역은 한·중·일이 200해리 EEZ를 적용할 경우 상호 중복이 불가피하며, 도서 영유권 문제 및 풍부한 해저자원의 부존 등으로 3국간의 이

51) 정용현·문광진,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한반도 해양 안보,”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839호(01-9), 2001. 3. 19, p. 1.

52) 다음의 논의는 정용현·문광진,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한반도 해양 안보,” pp. 2~6을 참조하였음.

해관계가 상충되어 있어, EEZ에 대한 해양경계선의 획정이 어려운 해역이다. 따라서 중북 수역의 경계획정이 해양법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잠정적인 협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는 해양 분쟁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특히 당사국들의 경쟁적 경제개발, 그리고 도시화 추세로 인해 급격한 에너지 자원의 수요가 촉발됨으로써 오일과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⁵³⁾ 또한 해양에서의 국제범죄, 환경오염, 해적 및 마약밀매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대두·확산되고 있는 바, 이는 해양 관할권 확보 경쟁과 함께 앞으로 역내 국가간 경쟁적인 해양력 증강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문제 역시 다자간 협력을 요하면서도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한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국가들이 유럽, 중동 및 극동 지역을 연결하는 교역을 위해서는 주요 해상교통로가 있는 말라카해협(Malacca Straits), 순다해협(Sunda Straits), 롬보크 및 마카산해협(The Straits of Lombok and Makassar), 옴바이·웨타르해협(Omabi-Wetar Straits) 및 토레스해협(Torres Straits)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해협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및 인도네시아 등이 영토권과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이 지역 거의 대부분에 대해 자국의 영토권 및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현재까지는 관련 당사국들이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력 수단을 결여하고 있어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

53) 예컨대 중국의 경우, 1993년까지 에너지 수출국이었으나 현재는 일일 원유 수입량이 60만 배럴을 넘는 수입국으로 전락하였으며, 2010년경의 수입량은 현 수입량의 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선섭, “중국이 보는 미래의 세계 안보환경,” p. 13.

행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원유, 천연가스, 천연광물 및 어로자원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점, 중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에너지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련국가들 대부분, 특히 중국이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전력 증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영유권을 위요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⁵⁴⁾

다. 동북아 안보질서의 특징

상기의 논의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등장 시점으로 가정하고 있는 2015년경 동북아 안보질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다.

우선 동북아 안보질서는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일본 및 러시아를 견제하는 균형자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비록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또는 미국을 능가하는 종합국력을 보유하는데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기 위해, 그리고 미국의 대일 군사적 역할 확대 요구, 일본내의 우경화 강화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 가속화 등으로 군사력 증강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적 제약요인과

54) 이규열·구분학·김광식·김해진, 「중장기 위협 평가 및 국가 안보 전략」, pp. 38~39.

미·일 동맹체제의 유지 등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에도 구소련 해체 이후 불안정한 독립국가연합의 미래와 러시아의 국내정치·경제적 불안에 따라 일차적으로 국내문제의 해결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 우위의 동북아 안보질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모든 분야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역내 정치적·경제적 불안정 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동북아 질서는 하나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강대국들로 구성되는 이른바 '비대칭적 다극화'의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역내 국가들간 분쟁의 잠재적인 요인들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간에는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관계에 있는 바, 1996년 대만해협에서의 긴장고조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행사라는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미·중간의 긴장 고조는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역내 국가들간의 영토 및 영유권에 대한 경쟁·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신뢰를 급속히 회복하고, 무기 및 군사기술 이전 등 군사·안보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으나, 양국간의 오래된 영토분쟁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불법적인 중국인 이민의 급증과 국경무역의 번성은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팽창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를 가증시키고 있다.⁵⁵⁾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북방도서 문제는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강력한 러시아의 극동군사력과 불안

55) 심경욱·유영철, “러시아연방 극동지역의 전략적 이해와 군사력 추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단』 제37호(1997년 봄), pp. 28~29.

정한 국내 정세 등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는 일본 안보정책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간에도 이미 언급한 침각열도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간의 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남사군도 및 서사군도 수역을 중심으로 해상교통로와 해저자원을 둘러싼 양국간 경쟁과 대립도 잠재적인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잠재적 분쟁요인들은 역내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군사력 증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인해 점차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해상에서의 경쟁·대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수요가 급속히 촉발됨에 따라 해저자원의 개발 및 확보 노력이 대폭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른 ‘국가영역의 신개념’의 대두로 인해 영토 및 영유권을 위요한 분쟁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역내 국가들은 해군력 증강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는 결국 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이 냉전체제로의 회귀, 즉 재양극화(re-polarization)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와 함께 대만문제로 인하여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미국은 미·일동맹을 강화할 것이고, 중국은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일에 대항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한반도가 자국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기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통일한국을 미·일 동맹 구조속에 견고하게 유착시키고자 할 것이며, 중국 역시 대미·일 전체의 일환으로 통일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

이다.

다섯째, WTO의 역할 및 기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는 이른바 ‘참새떼’모형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역내에서는 물론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경쟁과 이에 따른 마찰을 불가피하게 심화·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이에 따른 역할 변화는 한반도 통일의 과정은 물론 통일한국의 등장 이후에도 여전히 이 지역 안보질서의 변화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역할 변화는 역내 타 강대국들, 즉 중국, 일본, 러시아의 안보정책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동북아 질서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역내 국가들의 대통일한국 정책

가. 미국

Gerrit Gong은 동북아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통일한국은 ①민주적이고 안정된 정부, ②정치적, 경제적으로 개방적인 체제, ③적정규모의 자주적 국방력 구비로 지역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⁵⁶⁾ 이는 다시 말해서 미국은 통일한국이 자국과의 연대 하에 또는 영향권 하에 있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56) Gerrit W. Gong, "Kore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Amos A. Jordan ed., *Kore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3), p. 115.

로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⁵⁷⁾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미국이 통일한국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는 통일한국이 ‘친중국화’되거나 중국과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미국의 우려는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록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전개될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동맹관계의 약화 내지는 해체 결과를 초래하여 한반도에 주한미군 및 군사기지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한편,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유발함으로써 결국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 및 영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통일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도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통일한국의 등장은 북한이라는 한·일 공동의 위협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양국간의 협력적 요소가 악화되는 반면에 한국 내에서의 민족주의 강화와 이에 따른 반일 감정의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갈등적·대립적 요인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와 같은 한·일관계의 악화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유지·강화함으로써 한·일간의 분쟁가능성, 불안감 및 군비경쟁 가능성 등을 억제하는 동시에 양국간 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자 할 것이다.

57)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유지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최근 미국측의 주장은 Robert Dujarric, *Korean Unification and After: The Challenge for U.S. Strategy*; William O. Odom, “The US Military in Unified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II, No. 1 (Summer 2000); 오 헨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장래,”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등을 참조 바람.

미국은 통일한국이 북한이 개발하고자 했던 핵시설을 활용하여 핵무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핵무장화는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시킬 것이고 동북아 역내 국가들간 핵군비 경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통일한국의 핵무장화를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을 통해 통일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자 할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스스로 자국의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한, 통일한국과 타국과의 동맹관계 형성을 저지하고, 동북아에서의 미국 세력과 영향력을 견지·강화하기 위해 통일 후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일본

J. Stapleton Roy는 일본이 통일한국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립(neutrality), 핵무기(nuclear weapons), 민족주의(nationalism)의 3N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⁵⁸⁾ 이는 다시 말해서 일본이 통일한국에 대해 갖는 이해는 ①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일본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통일한국, ②비핵화 통일한국, ③통일시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확대 등 한·일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의미한다.⁵⁹⁾ 이렇게 볼 때 통일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

5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의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과 한미관계의 미래』,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01-07(2001. 7), p. 3.

59) Michael J. Green, "Japan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 and World Affairs*, Summer 1998, pp. 204-205; Michael H. Armacost and Kenneth B. Pyle, "Japan and the unification of Korea: Challenges for U.S. Policy Coordination," Nicholas Eberstadt and Richard J. Ellings(ed.), *Korea's Future and the Great Powers* (Seattle: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in

국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일본은 중립한국이 반드시 중국의 궤도에 편입되어,⁶⁰⁾ 중국과 연합하여 반일본 노선을 형성함으로써 일본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미동맹의 약화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군 또는 완전 철수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내 미군주둔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 지지를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안보태세를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대폭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통일한국의 등장이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통일한국이 한·미동맹의 유지와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속 허용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첩되는 통일한국과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공조 노력을 통해 미·일 안보협력체제와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부분적으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⁶¹⁾

한편 일본은 통일한국이 경제적으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우려하는 반면에 한반도 통일시 한국경제의 혼란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상품과 투자에 대한 시장과 무역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을 감안하여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일본은 통일한국의 북한 지역 경제 재건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재정적 투자 및 지원을 제공

association with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0), pp. 126~127.

60)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의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과 한미관계의 미래」, p. 3.

61) 시카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군사적 관리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p. 241.

함으로써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중국

중국의 한국전쟁 참여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강대국이 한국과의 국경지역에 군사적으로 주둔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기피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가장 큰 관심은 한·미동맹의 지속 여부와 주한미군의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는 물론이고 통일한국이 중립을 표방하거나 안보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중관계가 악화되어 있을 경우 이는 중·일관계의 악화도 초래할 것이고 통일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의 일원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양상을 띠는 것을 우려하여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도록 대한민국 및 대미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주한미군은 유엔군의 일부이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관해 유엔 상임이사국이며 주변국인 중국·러시아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유엔평화유지군에 그 역할을 넘겨야 함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⁶²⁾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만한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리고 미·중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강력히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바, 주한미군의 철수가 일본의 역내 영향력 증대라는 중국이 바라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중국은 통일한국의 북부지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적극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62) “미국·중국·일본·러시아 한반도 주변 4대국 핵 보유한 통일한국 받아 들일 수 없다,” 『월간중앙』, 2001년 7월호, p. 118.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통일시 난민들이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되는 것과 연변자치구에 거주하는 약 100만명에 달하는 한국인들 사이에 민족주의가 고조되어 한국 주도하에 통일된 한국과 일체감을 갖게 되는 것을 우려할 것이다.⁶³⁾ 이와 관련,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한국의 재외동포법이 개정될 가능성에 대해 2001년 12월 6일 리빈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 내 조선족은 핏줄로는 한국 국민의 동포이지만, 중국의 56개 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가간 관계를 잘 고려해 재중 조선족 문제를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⁴⁾ 리빈 대사의 발언은 한국의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1948년 한국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재외동포와 그 자손이 재외동포로 인정될 경우 한·중간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이 통일 직후 국경문제를 제기하였듯이 통일한국도 국경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중국은 궁극적으로 안보영역에서는 물론 여타 분야에서도 미국이 통일한국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통일한국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라. 러시아

러시아가 통일한국에 대해 갖는 가장 큰 관심은 한반도의 비핵화일 것인 바, 이는 통일한국의 핵무장화는 일본의 핵무장을 야기함으로써 러시아의 국익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시 대량의 탈북 난민이 연해주 지역으로 유입되어 이

63) Scott Snyder, *North Korea's Decline and China's Strategic Dilemmas* (Washington, D.C.: USIP, October 1997), pp. 7~9.

64) 『중앙일보』, 2001년 12월 7일.

지역의 민족구성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경제적·문화적 결속이 이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한미군의 통일한국 주둔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접경지역 인근에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과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통일한국 주둔에 대해 중국보다는 타협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러시아는 역내에서의 역할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그리고 통일한국이 특정 국가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는 것을 가능한 한 견제하는 차원에서 통일한국이 포함되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체제의 구축과 역할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에서의 개발과 협력은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크고도 장기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국가와 공동으로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자국 영토내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된 한반도는 한반도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러시아가 동아시아내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및 발전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는 통일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지위를 제고하고자 할 것이다.⁶⁵⁾ 이와 함께 러시아는 북한의 채권국으로서 통일한국의 채무 승계와 관련하여 관심을 보일 것이다. 요컨대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통일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바, 특히 러시아가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룰 경우에는 동북아 내에서의 지위 확보와 미국, 일본

65) 마점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 협조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p. 269.

및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 안보,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서 통일 한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IV. 통일한국의 위상 및 안보 위협

본 장에서는 통일한국의 상대적 위상과 제Ⅲ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이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협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바, 이들에 대한 분석은 다음에서 제시될 통일한국의 안보정책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1. 통일한국의 상대적 위상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현재 한국은 경제규모의 측면에서 10위 정도의 수준에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병역 규모 및 국방비의 측면에서 10위권 이내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국력은 통일이 달성될 경우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나 통일 이후에나 세계적인 강대국들, 즉 인구·영토·군사대국인 중국, 경제·기술대국인 일본, 영토·군사대국인 러시아, 그리고 인구 및 영토의 측면에서 대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 제1의 경제·기술·군사대국인 미국 등의 사이에서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에서는 통일한국의 위상을 경제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전망해 보고자 한다.

가. 경제적 위상

현재의 남북한 인구는 7천만명 정도이나, 2010년경에는 7천7백만명~8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인구는 각각 14억2천5백만명, 1억2천8백만명, 3억1천3백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⁶⁶⁾

국민총생산(GNP)의 경우 1990년에 일본은 남북한의 약 11.2배, 중국은 남북한의 약 1.5배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0년(한반도 통일을 상정하되, 통일비용은 감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이 통일한국의 약 8.16배, 중국이 통일한국의 2.37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⁶⁷⁾ 특히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⁶⁸⁾ 중국의 국가계획위원회 중국사회과학원은 합리적인 성장속도를 2001~2010년 기간동안 7~8% 정도로, 2011~2020년까지는 연6%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바, 이는 1인당 GNP가 2010년에는 1990년의 3배정도 증가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 GDP의 연평균 증가율이 8.5%를 유지하고 세계평균 성장률이 4% 수준일 경우, 중국이 세계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5.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달러 환산 GDP는 2020년에 약 3조6천억 달러로 세계 3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컨대 한반도 통일의 후유증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에도 2020년경 주변 강대국들의 경제 규모는 통일한국의 적게는 5배에서 최대 15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 통일은 한국이 파산국가인 북한의 경제

66) 김수용, “NEARDA의 무역현황과 발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두만강지역개발사업(TRADP)에 대한 분야별 평가』(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 225; 김규륜, 『통일한국의 대외경제협력 방향: 다자간 경제협력 관련』(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42에서 재인용.

67) 정창영, “TREDA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두만강지역개발사업(TRADP)에 대한 분야별 평가』, p. 72; 김규륜, 『통일한국의 대외경제협력 방향: 다자간 경제협력 관련』, p. 42~43에서 재인용.

68) 다음의 중국 경제성장 관련 자료는 안충영, “동북아 지역통합을 위한 전략,” 홍철·김원배 편저, 『21세기 한반도 경영전략: 지경학적 접근』, p. 201을 참조하였음.

를 접수·관리하고, 북한지역 주민들의 생존은 물론 이들의 생활 수준을 남한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반도 통일비용에 대한 추정은 통일시기 및 방법, 통일비용의 개념, 통합단계에서의 남북한 발전수준 등에 대한 상이한 가정으로 인하여 최소 400억 달러에서 최고 1조 8천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⁶⁹⁾ 그러나 확실한 점은 독일의 경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엄청난 비용이 요구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통일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상기한 주변 강대국들의 경제성장을 감안하면, 통일한국의 상대적인 경제력은 장기적인 통일의 시너지 효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상당기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군사적 위상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은 병력 규모 및 국방비의 측면에서 세계 10위권 내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북아 주변국가들과 비교할 경우에는 <표 1>의 국방비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다.

69) 한반도 통일비용과 관련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 『남북한 경제관계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1); 신창민, 『남북통일: 비용, 조달방안, 새통일방안』 (서울: 한우리연구원, 1992); 안두순, 『한반도통일과 경제통합』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2); Jin-Young Bae, "Speed and Timing of Economic Integration: Unification Cost Approach," paper presented for International Seminar on *Two Years Since the German Unification: Economic Evaluation and Implication on Korea*, Seoul, 1~2 October 1992 등을 참조 바람.

<표 1> 주변국 국방비 비교⁷⁰⁾

구 분	GDP(\$억)	국방비(\$억)	국방비/GDP 비율(%)	병력(천명)
한 국	4,474	122	2.7	690
미 국	92,000	2,831	3.1	1,372
일 본	43,000	447	1.0	243
중 국	7,320	400	5.4	2,820
러시아	11,000	568	5.1	1,004
대 만	2,880	150	5.2	376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내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그리고 영토, 해양자원, 환경문제, 대테러 문제 등 국익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⁷¹⁾을 통한 질적 개선과 첨단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표 2> 동북아 각국의 전력증강 계획(2005년 기준)⁷²⁾

한 국	일 본	중 국	러 시 아
·4,000톤급 구축함(3) ·*7,000톤급 ('08:1) ·F-X전투기(20) ·공격헬기(18)	·이지스함(4→6) ·13,500톤급 호위함(2) (헬기탑재 경항모급) ·13,500톤급 대형수송함(2) ·조기경보기(4, 실전배치) ·공중급유기(4) ·F-2전투기(20→92) ·군사용 정찰위성(4)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8,000톤급 미사일 구축함 ·핵잠수함(추가건조) ·항공모함(1)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SU-27 전투기 ·SU-30MKK 전폭기 ·장거리미사일 (사거리 12,000km)	·핵추진순양함 ·SU-35전투기 ·차세대미사일(TOPOL-M) ·T-95 전차

70) 국방부,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국방부, 2001), p. 51에서 일부 인용.

71) 군사혁신은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전력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전운영개념과 조직편성을 혁신하여 전투능력을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현상이다. 국방부, 「국방백서 2000」, p. 164.

72) 국방부,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p. 21.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주변국들의 군사혁신 및 군사력 증강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능력을 살펴보면⁷³⁾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군사혁신의 기초이론인 ‘정찰-타격 복합체’를 창안한 군사대국으로서 미국과 거의 대등한 군사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바, 우주기술의 50%는 세계 최첨단 수준이고, 레이저 기술, 플라즈마 무기, 제3세대 핵무기 기술 등은 미국을 능가하는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형(prototype)만을 개발하고 양산은 지양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20~30년 후 러시아는 풍부한 부존자원과 기술적 저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의 위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평화헌법 하에서도 세계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다. <표 2>에서 나타나고 있는 2005년까지의 전력증강 계획 이외에도 2006~2010년 기간 중에는 대형 수송함에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우주기술 능력은 일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탄도미사일을 획득할 수 있는 ‘준 ICBM’ 국가의 수준인 바, 일본은 조만간 중량 8~10톤의 우주왕복선을 발사하고, 2050년까지는 인구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달 식민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 3위의 핵 국가이며 병력면에서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인 중국은 첨단 고도 기술면에서 주요 선진국보다 낙후되어 있으나, 최근 군

73) 다음의 자료는 권태영, “21세기 군사혁신과 한국군의 군사발전방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동북아시아 전략환경변화와 우리군의 발전방향』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 p. 48~53을 참조하였음. 주변국의 군사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및 분석은 윤정원, “군사혁신론,”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및 심경욱, “주변국의 군사혁신 비전과 전략, 그리고 잠재력 판단,”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2000 제VII권 제2호 등을 참조 바람.

사패러다임을 ‘첨단 기술군’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래 전쟁을 ‘핵 억제하의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under nuclear deterrence), 또는 ‘첨단기술 조건하의 국지전’(local war under high technology conditions)으로 전제하고, ‘적극 방위’ 전략에 의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0년경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세대 핵추진 잠수함을 실용화하고, 2015년경에는 5만톤급 항모 1~5척을 작전 배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우주기술 능력면에서는 2010~2020년경 유인우주선을 군사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10년 이내에 실시간 정찰위성을 확보하고, 상당수준의 무인정찰기도 실용화하는 한편, 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 및 AWACS, JSTARS 등 특수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수단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요컨대 상술한 바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증강계획 및 과학기술능력, 현재 세계 28위 수준(선진국의 50~80% 수준)⁷⁴⁾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 능력, 특히 군사과학기술은 주로 모방개발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한국이 군사적으로 주변 강대국들과 대등한 위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74) 박창권, “전환기 한국의 국방여건과 국방 소요,”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p. 338.

2. 통일한국의 안보위협 평가

가. 역내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협

대부분의 국제정치 학자 및 전문가들은 냉전 이후의 국제전략 환경이 유동성 및 가변성의 증대, 그리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현상은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양극체제의 해체로 인한 냉전적 대결구조의 소멸은 양극을 이루어 왔던 미국과 소련의 진영내 국가들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이 과거와 같이 유지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결국 각 개별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분리되는 여건을 조성하여 각국들간의 관계가 극히 개별적인 차원에서 설정·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전략상황의 안정성은 심각하게 교란되어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정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⁷⁵⁾ 이러한 맥락에서 이근 교수도 향후 세계질서는 냉전시기와 같이 양극체제로 나뉘어져 양진영에서 세력균형을 취하는 경직적인 세계질서보다는 각각의 이슈를 중심으로 국가들이 합종연횡하는 형태의 이슈중심, 예컨대 대테러문제에 대한 미국의 연합,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연합, MD문제에 대한 미국의 연합 등의 세력균형으로 특징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⁷⁶⁾ 특히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국제전략상황의 유동성 및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전용 박사는

75) 이규열·구분학·김광식·김해진, 「중장기 위협 평가 및 국가 안보 전략」, p. 15 및 p. 146.

76) 이근, “미-테러 사태와 국가-시민사회의 관계: 국내 및 국제정치적 함의,” 한국세계지역학회, 「미 테러사건과 내외 안보환경 변화 전망」, 2001년도 연말 학술회의(2001년 11월 23일) 논문집, p. 17.

“이번 테러사건을 계기로 동맹관계가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대 또는 우호관계가 새롭게 조성됨으로써 국제질서 전반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⁷⁷⁾

이와 같은 전세계적 전략환경에 대한 분석·전망의 연장선상에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간 전략적 상호관계의 유동성 역시 증가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즉 역내 국가들간 관계가 냉전기간의 상호 고정된 관계의 구조에서 벗어나 각기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접근과 이탈, 연대와 경쟁 또는 대립이 가변적으로 반복되는 극히 유동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⁷⁸⁾ 물론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전략환경 변화는 동북아의 전략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상기 ‘동북아 안보질서의 특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2015년 경의 동북아 안보질서는 ‘비대칭적 다극화’ 구조하에서 미국이 균형자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유동성은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유동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역내 역학관계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통일한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중국이 동북아 정책을 전환하여 미국의 중국 봉쇄에 대항하여 역전선을 구축하는 동시에 역내에서의 패권을 추구하고, 미국은 역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경우이다. 이 경우 미국은 대중국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고, 다른 한편 중국은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구축

77) 전웅, “대 테러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한국에의 파급효과와 대응책,” 한국세계지역학회, 『미 테러사건과 내외 안보환경 변화 전망』, p. 47.

78) 이규열·구분학·김광식·김해진, 『중장기 위협 평가 및 국가 안보 전략』, pp. 33~34.

하여 미·일에 대항할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어 역내에서의 긴장고조는 물론 군사적 충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양측 공히 통일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인 바, 통일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한국이 어느 일방과 협력할 경우 다른 일방과는 적대관계를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미국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동북아 정책을 비개입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역내의 세력공백으로 인해 중·일간 패권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이다. 즉 미국의 대동북아 비개입 정책은 곧 한·미동맹은 물론 미·일동맹의 해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대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과의 격렬한 패권경쟁을 초래함으로써 역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미국이 동북아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유지하되, 통일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약화 내지 해체하는 경우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는 일본과의 동맹, 그리고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동맹관계 유지만으로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한·미 동맹관계를 파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⁷⁹⁾ 또한 미국은 한반도 통일로 인해 한·미 양국 내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에도 양국간 동맹관계의 유지를 재고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대폭 증대되고, 한·일간 독도 영유권문제, EEZ 및 해양자원 등을 둘러싸고 분쟁의 발생·격화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역사적으로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중요시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한국은 미국의 지원 또는 중재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79) 김우상, “미·중 대결구도하 한국의 안보전략,” p. 45.

할 수도 있다.

넷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통일한국의 등장은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보다 더욱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역내에서 통일한국의 영향력이 대폭 증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세력경쟁을 전개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음을 뜻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세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통일한국은 어느 특정 국가에도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인 위치, 즉 ‘중립화’를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통일한국의 중립화는 주변 강대국들 모두의 합의와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바,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나. 해양안보에 대한 위협 고조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해양관할권, 영토 및 영유권을 둘러싼 경쟁과 분쟁, 해군력 증강 추세, 그리고 해양에서의 국제범죄, 환경오염, 해적 및 마약밀매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 대두·확산 등으로 인해 해양안보에 대한 위협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⁸⁰⁾ 이들 위협은 그 자체로도 통일한국의 해양안보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평시에는 ‘교역의 통로’(Sea Lines of Communication)가 되고 전시에는 ‘전략적인 생명선’(Strategic Lines of Communication)의 역할을 하는 해상교통

80)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 고의 제Ⅲ장 1절 나 (4)의 ‘다자간 협력 및 갈등관계’를 참조하기 바람.

로의 안정적 확보와 항해의 자유까지도 저해하는 상황을 야기한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주로 교역력에 의존하여 성장하고 있고, 전략자원의 수급에 있어서도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운송의 대부분은 해상교통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재 한국은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했으며,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전략자원의 수급에 있어서는 전체 곡물의 70%, 전체 에너지의 90%, 그리고 한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비연료 광물자원의 대부분을 해상운송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현재에도 높은 해외 의존도와 이에 따른 해상운송의 의존도는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로 인해 인구가 대폭 증가됨에 따른 곡물 수요와 북한지역 경제를 재건하는데 요구되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북한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활용 가능한 광물자원의 종류와 양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안보에 대한 위협의 고조는 통일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 불특정 안보위협 of 증대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전통적인 안보인식에 대한 일대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바, 정보혁명에 따른 새로운 안보위협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주체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과 이들 주체가 ‘비대칭적 전략’(asymmetric strategies)⁸¹⁾을

81) ‘비대칭적 전략’은 ‘목표물’ 또는 ‘희생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점이나, 단지 제한적인 방어만을 하고 있는 취약점에 대해 공격하는 것으로서, 적의 강점을 다른 능력으로 공격할 때, 정규전을 예상하는 적에게 비정규전을 수행할 때, 또는 재래식 전장에서 대량살상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탈냉전 시대 미국의 군사전략을 재평가하고 1997년에 발표된 「4개년 국방보고서」는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비대칭적 전략을 미래의 심각한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⁸²⁾

<표 3> 정보화시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⁸³⁾

수 준	하위유형	행 동 목 표
개인수준	단순한 해커	보복·흥미·사소한 파괴
	악의적 크래커	금전·보복
국가하위수준	임시집단	상해·복수
	범죄집단	금전·권력
	정치테러집단	정치적 쟁점 또는 명분에 대한 지지 획득 및 반대 억지
	교조주의 테러집단	공포·고통·파괴
	반정부집단	정부전복 또는 분리독립
	상업조직	산업스파이 활동·정보판매
국가수준	불량국가	지역분쟁에서의 억지달성, 승리 또는 상대방의 개입 비용 증가·스파이활동
	경쟁국가	주요대결에서의 억지달성 또는 승리·스파이활동·경제적 이익
초국가 수준	초국가적 범죄조직	국제커넥션·금전·권력
	국제 비정부기구	자발적 국제연대·국가행위자에 대한 견제

한편 Bruce Bennett은 비대칭적 전략의 개념을 한국에 적용하여 통

무기를 사용할 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Bruce Wm. Bennett, “비대칭적 전략과 한국의 군사기획,”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1999 제VI권 제1호 및 서정해, “군사력의 비대칭성에 대한 소고,”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771호(99-23), 1999. 7. 5. 등을 참조 바람.

82) William S. Cohen,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Department of Defense, May 1997.

83) 김주홍,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41집 1호 2001, p. 75.

일한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⁸⁴⁾

- 침공 및 영토지배 위협:
 - 이웃국가의 침공
 - 비정부 장악
 - 황해에서 석유발견
- 제한 공격 위협:
 - 테러
 - 화생방무기에 의한 강압
 - 정보전
 - KAL 007 사건과 유사한 테러
- 국내 안보위협:
 - 북한 마피아
 - 국내 국경 통제
 - 북한 화생방 무기 제거
 - 폭동·소요

이정민 교수 역시 복합적 분쟁 또는 중강도 분쟁, 저강도 분쟁,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OOTW: Operations Other Than War), 대량살상무기 등을 이용한 비대칭적 위협, 그리고 정보전 등의 조합이 향후 10~15년간 한반도의 주요 위협수단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⁸⁵⁾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통일한국은 최근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범죄, 테러, 마약, 환경, 난민, 해적행위, 사이버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위협과 기존의 영토 범주를 벗어나 우주 및 사

84) 브루스 베넷, “비대칭적 전략과 한국의 군사기획,” p. 83에서 일부 인용.

85) 이정민, “남북화해시대 한국 국방의 과제와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p. 299.

이러 공간까지 포함하는 전장영역의 확장 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한 불특정 안보위협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라. 군사 후진국으로서의 위상 고착화 가능성 증대⁸⁶⁾

상술한 한반도 주변강대국들의 군사혁신 및 군사력 증강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능력을 감안할 때, 향후 국제 군사질서는 이들 주변 강대국 및 서유럽 등 소수의 기술 및 경제 선진국들에 의한 과독점체제로 정착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를 달리하는 새로운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이들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후발 국가들의 추격을 철저히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발 국가들은 자체적인 능력으로 첨단무기와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한, 결코 선진 강국들과 대등한 수준의 전력이나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항구적인 열세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앞서 검토한 통일한국의 경제적 및 군사적 위상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의 과학·기술적 수준과 국방과학부문에 대한 R&D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국가경제력은 군사혁신의 성과를 높이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통일한국은 상당 기간 군사 후진국의 위상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마. 국내 안보인식 저하에 따른 국방비 삭감 압력 증대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국 국민의 안보의식은 상당 수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한반도 통일은 북한이라는 최대의 현존 안보위

86) 다음의 논의는 이규열·구본학·김광식·김해진, 「중장기 위협 평가 및 국가 안보 전략」, pp. 146~147을 참조하였음.

협의 소멸을 의미하는 반면에 불특정 위협의 특성상 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식 수준은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의 안보의식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뚜렷하게 입증하고 있다. 예컨대 남북 정상회담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하여 한국 국민들의 견해를 변화시켰는 바, 정상회담 이전에 비해 미군이 당장 철수하거나 통일 이후에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은 증가하고, 평화체제가 수립되거나 북한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에 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입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⁸⁷⁾

또한 통일의 후유증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대폭 증대될 것이라는 사실도 안보의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비를 삭감하여 보다 많은 재원을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제, 과학·기술 및 사회복지를 위해 할당해야 된다는 압력이 증대될 것이며, 이는 결국 통일한국이 확보해야 하는 국방력의 달성을 제약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87) 한용섭, “남북관계 개선과 안보의식의 변화,” 한국국방연구원,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p. 171.

V. 통일한국의 안보정책 추진방향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통일한국의 안보환경 및 상대적 위상과 이에 따라 제기되는 제반 안보위협들에 대한 분석·전망을 바탕으로 통일한국이 추진해야 할 안보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동맹 형성을 기축으로 한 안보 확보

상술한 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통일한국은 분단 상황에서 보다 더욱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본 안보정책상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안보정책 노선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Robert Scalapino는 ①고립, ②강대국 사이에서의 균형, ③강대국과의 동맹을,⁸⁸⁾ 맥테빗은 ①미국 및 서방세계와의 동맹·제휴관계 지속, ②중국의 궤도하에 들어가는 형태, ③전략적인 독자성 확보, ④중립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⁸⁹⁾ 노경수 교수는 통일한국이 기본적으로 전략적 독립, 동맹, 그리고 중립주의 등 3가지 안보상의 선택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⁹⁰⁾ 또한 일본의 시카타는 ①모든 주변 국가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②지금과 같은 한·미·일 3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 ③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는 것 등을 통일한국

88) Robert A. Scalapino, "A Concluding Perspective," Bae Ho Hahn and Chae-Jin Lee, ed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ajor Powers* (Sungnam: The Sejong Institute, 1998), 이태환, "통일한국의 안보외교," p. 58에서 재인용.

89) 맥테빗, "동북아의 안보 도전과 안보질서 구축," pp. 49~50.

90) 노경수, "남북한의 대외전략과 교차수교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pp. 113~115.

이 취할 국가전략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⁹¹⁾ 이들 대안들은 대체로 동맹관계 구축, 전략적 독립 확보 및 중립화의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으며,⁹²⁾ 주변 안보환경 변화 또는 통일한국의 종합 국력수준 등의 변수에 따라 각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통일한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맹관계의 구축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중립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통일한국은 1955년 오스트리아의 경우와 같이 일방적인 선언을 통하여 영구중립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⁹³⁾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이 이 행위를 인정하여야만 국제법상의 영구중립국 지위를 획득하고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팽태환·주승호 교수는 주변 강대국들은 중립국 형태로서의 통일한국의 수립에 합의할 수 있는데 이는 중립화된 통일한국이 그들의 이익을 해치거나 그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즉 주변 강대국들은 한국을 중립

91) 시카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군사적 관리 방안,” p. 238.

92) 미국 및 서방세계와의 동맹·제휴관계 지속, 중국의 궤도하에 편입, 한·미·일 3자 관계 유지 등은 어느 특정 국가와 동맹을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동맹관계 구축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93) 한반도의 중립화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여러 학자 및 전문가들에 의해 거론되어 왔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Gregory Henderson, “Korea: Militarist or Unification Policy,” William J. Barnds, ed., *The Two Koreas in East Asian Affair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6), p. 127; In K. Hwang, “A Quest for Korean Unification Via Permanent Neutrality,” Tae-Hwan Kwak, et al.(eds.), *Korean Unification: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84); 송병록,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민군관계,” 한국정치학회 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1993), p. 639; 팽태환·주승호, “21세기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통일과 그 이후,”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10권 1호, 1998년 상반기, pp. 187~191 등을 참조 바람.

화시킴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주요한 분쟁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한국은 자국의 독립과 영토보존을 유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동북아에서의 평화, 안보, 영구적 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⁹⁴⁾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립화에는 제반 불리한 점이 수반된다는 사실 이외에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강대국들간의 경쟁이 심하다는 점과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세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한국의 중립화에 대해 합의·보장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미국이 동북아 정책을 고립주의로 전환할 경우에는 여타 주변 강대국들간의 세력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간 통일한국의 중립화에 대한 합의·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이 전략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국력의 확보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통일한국이 전략적 독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역내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고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주변 국가들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의 유지가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은 주변 강대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위상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이들 국가들과 대등한 군사력의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 및 군사과학기술 능력 등을 보유하는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독립은 통일한국이 가장 선호하는 안보 확보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94) 광태환·주승호, “21세기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통일과 그 이후,” pp. 188~189.

하고 실현 가능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중립화 및 전략적 독립 확보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결국 통일한국은 역내 특정 국가와 동맹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안보를 확보하는 대안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동맹 형성을 통한 안보확보 대안은 통일한국의 독자성, 자존심 및 고유한 안보와 번영 등을 일정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요인을 수반한다.⁹⁵⁾ 그러나 이는 통일한국이 능력 범위 내에서의 군사력 유지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통일한국이 동맹관계의 구축을 통해 안보를 추구할 경우 어느 국가를 동맹의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시점에서는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국내외의 군사 및 안보전문가들이 한·미동맹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김우상 교수는 ①가능한 한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 ②한반도에 사활적인 국가 이익이 있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국가, ③유사시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에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 등 세 가지의 동맹 상대국 선택기준을 제시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보다는 미국이 훨씬 적합한 동맹의 파트너라고 주장하고 있다.⁹⁶⁾ 그러나 동맹 상대국의 선정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이 동북아에서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요한 군사적 위협으로 등장할 경우, 또는 북한의 소멸에 따른 한·미 양국의 국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미국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미·일동맹만을 유지하는 상황 등을 상정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통일한국은 중국

95) 노경수, “남북한의 대외전략과 교차수교 전망,” p. 114.

96) 김우상, “미·중 대결구도하 한국의 안보전략,” p. 99.

또는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안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미동맹의 성격 및 역할 변화 추진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미국은 통일한국의 등장 시에도 동북아시아에서 자국의 우위를 겨냥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입 및 확장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그리고 통일한국의 ‘친중국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를 목적으로 유지되어온 한·미동맹은 통일한국의 등장에 따른 상황의 변화에 적합한 성격과 역할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한·미동맹의 재정립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대략적인 조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⁹⁷⁾

97)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해서는 양국의 민간 전문가들 각각의 연구에 의해, 그리고 양국 전문가들의 합동연구에 의해 이미 구체적으로 많이 논의·제시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는 대체로 유사한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방안은 바람직한 대안인 것으로 사료된다. 예컨대, 한국 민간전문가들의 최근 연구에 대해서는 권태영·정춘일 공저, 『선진국방의 지평: 21세기 국방발전의 비전과 방향』 (서울: 을지서적, 1998); 김성한, “한미동맹체제와 주한 미군: 역할 변화의 모색,”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1999 제VI권 제1호, pp. 167~192; 김계동,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 틀로,” 동아일보 부설 21세기 평화연구소 주최, 『한반도와 미국: 어제 오늘 내일』 학술회의(2000년 8월 19일) 발표 논문; 김창수,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미동맹의 미래,” 김학성 외, 『한반도 평화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275~306 등을 참조 바람. 한편 미국 전문가들의 연구에 대해서는 각주 57)을 참조 바람. 또한 양국 전문

첫째,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공히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하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소멸된 상황에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한·미·일간 중국을 포위하는 대중국 연합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러시아와 함께 ‘반미연합전선’의 형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는 결국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고조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기본 성격은 통일한국의 안보를 지원하되, 역내의 안정 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지역안보동맹’, 즉 특정 국가를 적대국으로 상정하지 않고 지역안보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우선적으로 주한미군의 병력구조와 주둔 위치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둘째, 해양안보를 확보하고 불특정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또는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으로 인해 통일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주요 해상교통로가 위치하고 있는 해역에서 해양자원 및 영토권을 둘러싼 해양분쟁의 가능성과 국제범죄, 테러, 마약, 환경, 난민, 해적행위, 사이버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방어를 주목적으로 하는 한·미동맹은 이와 같은 불특정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형태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한미군의 병력구조가 변화되어야 하는 바,

가들의 공동 연구로는 Jonathan D. Pollack, Young Koo Cha, et al.,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The Future of U.S.-Korean Security Cooperation* (Santa Monica, CA: RAND, 1995); Jonathan D. Pollack and Chung Min Lee,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Scenarios and Implications* 등을 참조 바람.

대부분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은 해·공군병력을 중심으로 최소 병력의 지상군 주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주둔지를 한반도의 남부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해의 자유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주한미군의 기동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실질적으로 대등한 동반자 관계의 동맹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한·미 동맹관계는 주로 ‘대등한 동반자’ 또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표현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국내 정치적 혹은 외교상의 레토릭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현재 한·미 동맹관계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대미 의존관계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하겠는 바, 이는 주로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로 인해 북한이라는 군사적 위협이 소멸될 경우 통일한국 내에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의 가장 큰 명분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국민의 안보의식은 상당 수준 저하되는 반면에 자주성과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견해는 강화되어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파기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한·미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한 조항을 조속히 개정하여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미감정을 억제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한국이 독자적 군사지휘체제 하에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역내 문제에 대해 협의·협조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내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한국의 역할, 예컨대 안병준 교수의 ‘한반도 가교론’⁹⁸⁾, 현인택 교수의 ‘동북아 허리론’⁹⁹⁾ 및 김우상 교수의 ‘중추적

동반자론'¹⁰⁰⁾ 등은 실질적으로 대등한 한·미 동맹관계가 전제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적극 추진

통일한국이 한·미동맹의 유지만으로 안보를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최근 증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불특정 위협에 대한 대처, 해양안보 확보 및 역내의 군비통제 등은 다국간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 동북아 지역에서는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안보기구의 전통 부재, 역내 국가간 이해관계의 상이성, 역내 국가간 위협인식의 차이로 인해 양자관계를 중시하는 관련국의 입장, 역사적 피해의식과 상대방에 대한 불신 등으로 협력체의 형성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 여건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소규모의 지역분쟁 및 '전쟁이외의 군사작전'과 함께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s), 평화집행(Peace Enforcement), 평화창출(Peace Making) 등의 소요가 증대됨에 따라 '연합작전' 또는 '제휴'(coalition)와 같은 다국적 작전(multinational operations)의 필요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는

98) 안병준, “동북아 지역 정치경제의 구조와 전망,” 홍철·김원배 편저, 『21세기 한반도 경영전략: 지경학적 접근』, pp. 94~97.

99) 현인택,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관계와 한국의 미래지향적 안보정책: 동북아 허리론의 제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1998 제V권 제2호, pp. 162~186.

100) 김우상, “미·중 대결구도하 한국의 안보전략,” p. 98.

점이다.¹⁰¹⁾ 특히 9.11 테러사태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중국과 러시아가 대테러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협력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하겠다.

둘째,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형성에 대해 소극적 내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미국, 중국 및 일본이 협력체의 형성에 찬동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95년의 제2차 EASR과 1998년의 제3차 EASR 보고서는 기존의 안보동맹을 유지하고 다자간 안보협력도 점차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¹⁰²⁾ 한편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국제기구 또는 다자간 협정 등은 미국의 국익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¹⁰³⁾ 이는 다자간 안보협력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미국이 단독으로 모든 분야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미국의 입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함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일본 역시 최근에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의 ‘동북아 6개국 선언’에 조응하여 1998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6자회담’을 제안하였고, 1999년 10월 한·일 각료회담 및 2000년 8월 중·일회담에서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이를 추진하고 있다.¹⁰⁴⁾

101) 김창수,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미동맹의 미래,” pp. 288~289.

102) 김창수,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미동맹의 미래,” pp. 294~295.

103) 김국신, 『미국의 대북정책: 남북정상회담 및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41.

104)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국가전략·포괄적 안보전략·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전략』, pp. 52~53.

한편 중국은 역내 국가의 평등한 참여와 상호존중, 내정 불간섭, 역내 양자간 신뢰구축 노력 선행 및 구속력 없는 협력체 형성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자안보협력체 논의에 적극 찬동·참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¹⁰⁵⁾ 이러한 입장은 2001년 11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10+3'(아세안+한, 중, 일)회의시, 주룽지 총리의 담화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주룽지 총리는 “당장 테러주의, 마약 조직, 불법 이민 등 다국적 범죄활동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어,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적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치 및 안보 부분의 대화가 이러한 영역을 포함하여, 협력의 내용을 확대·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¹⁰⁶⁾

따라서 한국은 이와 같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늦어도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시기에는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는 주변국들과의 신뢰구축 및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통일한국이 위협적인 세력이 아니라 역내의 안정 유지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컨대 한국은 국제 평화유지 및 평화창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신뢰와 전략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양자간 동맹과의 상호보완적 전략, 단계별·포괄적 접근전략, 그리고 점차 광역적인 안보문제와의 연계, 즉 동아시아 및 아·태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와의 연계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수행함으로써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¹⁰⁷⁾

105) 신상진, “한국의 안보전략과 중국,” p. 49.

106) 서문길, “중·일·한 3국의 협력과 중일관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주최 2001년도 국제학술회의(2001년 11월 23일), 『동북아 신질서와 한·중·일 협력』 발표 논문, p. 5.

4. 양자간 안보협력 증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통일한국이 주변국과 양자간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자간 갈등과 대립은 다자간 협의에 의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안에 따라 양자간의 해결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한·중간에는 한반도 통일시 난민들이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됨에 따른 문제, 연변자치구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통일한국과 일체감을 주장할 경우에 야기되는 제반 문제, 해양 경계선 획정문제 및 국경문제 등, 그리고 한·일간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 및 해양 경계선 획정문제 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양자간 갈등의 발생과 군사적 충돌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군사·안보적 압력을 해소 내지는 완화시키는 한편,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구축을 촉진시키는 수단의 측면에서 양자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미동맹의 유지는 통일한국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안보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일간 안보협력의 강화는 한·미 및 미·일동맹의 지속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국민적 감정 및 한·미·일간의 군사적 결속에 민감한 중국의 입장 등이 한·일 안보협력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들 제약요인을 극복하여 일·중·러와의 안보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추진하여야 할 것

107) 이들 전략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는 박종철,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98~101;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국가전략·포괄적 안보전략·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전략』, pp. 60~66 등을 참조 바람.

이다. 이와 관련, 이미 언급한 ‘한반도 가교론’, ‘중추적 동반자론’ 및 ‘동북아 허리론’ 등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입각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5. 통일한국에 적합한 군사혁신 추진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정보화 시대의 도래, 불확실하고 불특정한 안보위협이 증대 등은 미래의 전쟁 패러다임을 정밀타격·정보마비전 양상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이는 걸프전과 코소보전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미국을 선두로 주변국들 모두 새로운 군사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역시 군사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바, 국방부는 이미 1999년 4월 ‘국방개혁추진위원회’ 산하에 ‘군사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군사혁신의 개념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예컨대 <표 4>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⁸⁾

<표 4> 한국군의 군사혁신 모색¹⁰⁹⁾

구 분	합 참	육 군	해 군	공 군
비전서	합동비전 2015	육군비전 2010: (I), (II), (III)	해군비전 2020	대한공군 2030
핵심내용	정보전 위주의 통합전투	다차원 동시 통합전투	최일선 방어군, 전략군 역할	항공우주군, 전략군 도약
주요특징	한반도 내부 지향적	북한 및 주변 위협 동시대비	국가안보와 변영의 핵심군	동북아시아 국가안보 핵심군

108) 국방부, 「국방백서 2000」, p. 164.

109) 윤정원, “군사혁신론,” p. 185.

따라서 다음에서는 군사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통일한국의 능력과 환경여건에 적합한 군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통일한국이 직면하게 될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사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 통일한국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위협보다는 최근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위협과 전장영역의 확장 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한 비대칭적 안보위협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이들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비대칭전략과 전력의 발전에 입각하여 군사혁신을 추구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곧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혁신을 모방하기보다는 한국에 적합한 독자적인 군사혁신의 개념과 방안을 연구·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주변 4국 모두 자국의 현실에 맞는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¹¹⁰⁾

둘째, 한국의 능력 범위 내에서 군사혁신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통일한국의 위상에 대한 논의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증강계획 및 과학기술능력과 현재 한국의 군사과학기술 능력 및 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 질 경우에도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혁신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군사혁신방안을 강구·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¹¹¹⁾ 우선 정보·기술군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식별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즉 우선순위를 설

110) 이에 대해서는 심경욱, “주변국의 군사혁신 비전과 전략, 그리고 잠재력 판단,”을 참조 바람.

111) 다음에서 논의되는 방안은 권태영, “21세기 군사혁신과 한국군의 군사발전방향,” pp. 78~81을 참조하였음.

정하여 중점적으로 투자·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래전에서는 정찰·감시·지휘통제 네트워크(CAISR)분야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바, 이 분야의 능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형(prototype)까지만 개발하고 필요시 즉시 양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실전용 양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유형전력 요소인 병력, 장비, 시설 등은 획득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용도 많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요구되는 반면에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군사교리·전략, 조직편성, 지휘체계, 군내 인적자원의 자질 향상 등의 무형전력 분야를 새롭게 정립하고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셋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느 국가의 경우에도 한정된 국방재원으로 인해 군간에 예산 확보 경쟁이 전개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군사혁신은 기존의 군의 규모, 구조, 특성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한국의 경우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통일에 대한 기대 확대 및 막대한 통일비용의 요구 등으로 국민들의 안보문제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어 결국 국방예산의 삭감에 대한 압력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의 통합전투력 유지 및 발휘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인 바, 군사혁신은 군간 합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군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운영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¹¹²⁾

넷째, 한국의 경우, 군사혁신을 통해 미래형 국방태세를 확보해야

112) 윤정원, “군사혁신론,” p. 195.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인해 미래형 국방태세로의 전환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군사혁신은 그 특성상 1~2년의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1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한된 국방재원을 미래전력 건설을 위한 투자에 과도하게 할당할 경우, 기존 전력, 즉 대북 억제 및 방어 전력의 약화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혁신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고려하여 치밀한 계획 하에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일한국의 안보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안보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통일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시의 동북아 안보구조와 역내국가들의 통일한국정책을 분석·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한국의 상대적 위상과 안보위협을 평가하고 이들 분석 및 전망을 토대로 통일한국의 안보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미시적인 안보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한국의 안보정책 추진방향은 우리의 안보정책을 주변국의 전략과 정책에 따라 수동적으로 입안·추진하기보다는 보다 공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구체적인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차원에서보다는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에서는 결론에 대신하여 통일한국의 안보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구·개발함에 있어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안보 개념의 확장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최근 안보의 개념은 군사안보로부터 정치, 경제, 자원, 환경, 생태 등 비군사안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로서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겠다. 그런데 함택영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안보의 의미를 계속 확장하게 되면 국가이익이란 개념과 차별성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이 표상하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은 ‘일반의사’라는 개념만큼이나 막연한 것¹¹³⁾이라

113)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역량·군사

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이익은 당시 국가 최고지도자와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화된다는 점¹¹⁴⁾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국가안보의 개념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확장하여 국가이익과의 차별성이 모호하게 될 경우, 이는 개념상의 혼란뿐만 아니라 안보정책의 실현성 차원에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하겠다. 따라서 안보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안보요소들을 감안하되, 안보위협을의 주체, 대상, 긴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국가의 인원과 예산을 배정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한·미 동맹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관련된 문제이다. 최근 한국사회 내에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한 조항 및 주한미군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이에 따른 평화공존의 기대가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반도 긴장의 근본원인이며,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는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주로 반미 감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통일로 인해 북한이라는 군사적 위협이 소멸되어 한국 국민의 안보의식은 상당 수준 저하되는 반면에 자주성과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견해는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통일한국의 안보환경 및 종합국력 등의 객관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한·미동맹은 안보 확보

력」(서울: 법문사, 1998), p. 19.

114) 한용섭, “부문별 국가전략의 상호관계와 우선순위의 변화,”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2권 1호, p. 8.

방안의 일환으로 통일 이후에도 상당기간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미 동맹관계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양국간에 이견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변화되는 여건에 걸맞게 불평등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은 ‘반미’ 또는 ‘친미’라는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의해 그 필요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하겠다.

셋째, 통일한국의 종합국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한반도 통일은 우리민족의 번영과 국력신장을 보장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주변에는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강대국들이 존재하며, 통일의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즉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통일이 곧 주변 강대국들과 대등한 종합국력을 보유한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안보정책은 장기적인 통일의 시너지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보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내부 자원이 상당 기간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입각하여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권태영·정춘일 공저. 『선진국방의 지평: 21세기 국방발전의 비전과 방향』. 서울: 을지서적, 1998.
- 강원식. 『통일한국의 등장에 따른 동북아 안보구조 변화 대응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 서울: 도서출판 서울프레스, 1996.
- 국방부. 『국방백서 2000』.
- 김규륜. 『통일한국의 대외경제협력 방향: 다자간 경제협력 관련』.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달중·문정인·이석수 외. 『새천년 한반도 평화구축과 신지역질서론』.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 김덕기. 『21세기 중국 해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
- 김태현 편. 『신동아시아 안보질서』. 경기도 성남: 세종연구소, 1997.
- 김학성 외. 『한반도 평화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박종철.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박휘락. 『한국안보전략연구』. 서울: 법문사, 1993.
-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국가전략·포괄적 안보전략·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세종연구소.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제4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2000년 4월 20~21일).

- _____. 『국가전략』 제2권 1호. 경기도 성남: 세종연구소, 1996.
- 신창민. 『남북통일: 비용, 조달방안, 새통일방안』. 서울: 한우리연구원, 1992.
- 안두순. 『한반도통일과 경제통합』.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2.
- 옥태환·김수암. 『통일한국의 위상』.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서울: 박영사, 2001.
- 이규열·구본학·김광식·김해진. 『중장기 위협 평가 및 국가 안보 전략』.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0.
- 이태환 편.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전망과 대책』. 경기도 성남: 세종연구소, 1999.
-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서울: 법문사, 1998.
- 정호섭. 『해양력과 미·일 안보관계: 미국의 대일 통제수단으로서의 본질』.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
- 최경락, 정준호, 황병무 (공저). 『국가안전보장 서론: 존립과 발전을 위한 대전략』. 서울: 법문사, 1989.
- 한국개발연구원. 『남북한 경제관계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1.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단』 제37호(1997년 봄).
- _____.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1.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2001 국방비관련 학술세미나 논문집.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 _____. 『전략연구』, 1999 제Ⅳ권 제1호.
- _____. 『전략연구』, 2001 제Ⅷ권 제2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동북아시아 전략환경변화와 우리군의 발전방

- 향].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
-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역량·군 사력」. 서울: 법문사, 1998.
- 홍관희. 「남북관계의 확대와 한국의 국가안보」.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홍철·김원배 편저. 「21세기 한반도 경영전략: 지경학적 접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 1999.
- 황진환. 「협력안보 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남북한, 동북아, 국제군비통제를 중심으로」. 서울: 도서출판 봉명, 1998.
- Binnendijk, Hans, and Ronald N. Montaperto. *Strategic Trends in China*.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998.
- Brzezinski, Zbigniew K. *Out of Control: Global Turmoil on the Eve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Scribner's, 1993.
- Buzan, Barry.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1991.
- Chamberlin, Paul F. *Korea 2010: The Challenges of the New Millennium*. Washington, D.C.: The CSIS Press, 2001.
- Cohen, William S.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Department of Defense, May 1997.
- Dujarric, Robert. *Korean Unification and After: The Challenge for U.S. Strategy*. Hudson Institute, 2000.

- Eberstadt, Nicholas and Richard J. Ellings, ed. *Korea's Future and the Great Powers*. Seattle: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in association with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1.
- Haggard, Stephan and Chung-in Moon(eds.). *Pacific Dynamic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Industrial Change*. Boulder: Westview Press, 1989.
- Hoyt, Edwin P. *The Militarists: The Rise of Japanese Militarism since WWII*. New York: Fine, 1985.
- Jordan, Amos A. *Kore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Honolulu: Pacific Forum/CSIS, 1993.
- Khalilzad, Zalmay, David T. Orletsky, Jonathan D. Pollack, Kevin Pollpeter, Angel M. Rabasa, David A. Shlapak, Abram N. Shulsky, Ashley J. Tellis.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RAND, 2001.
- Knorr, Klaus and Frank N. Trager, eds. *Economic Issues and National Security*.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7.
- Lho, Kyongsoo and Kay Moller(eds.). *Northeast Asia Toward 2000: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1999.
- Mandel, Robert. *The Changing Face of National Security: A Conceptual Analysis*.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94.

- Pollack, Jonathan D., Young Koo Cha, et al.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The Future of U.S.-Korean Security Cooperation*. Santa Monica, CA: RAND, 1995.
- Pollack, Jonathan and Chung Min Lee.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Scenarios and Implications*. Santa Monica, CA: RAND, 1999.
- Snyder, Scott. *North Korea's Decline and China's Strategic Dilemmas*. Washington, D.C.: USIP, October 1997.
- Taylor, William Jr. et al. *Great Power Interests in Korea Reunification*. Washington, D.C.: CSIS, 1998.
-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September 30, 2001.
- Vogel, Ezra F. ed. *Living with China: U.S.-China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NY: W.W. Norton & Co., 1997.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
- Wolfers, Arnold. *Discord and Collaboration: Essays on International Polit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2.

2. 논문

- 김계동.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동아일보부설 21세기 평화연구소 주최, 『한반도와 미국: 어제 오

- 늘 내일」 학술회의(2000년 8월 19일) 발표 논문.
- 김성한. “한미동맹체제와 주한 미군: 역할 변화의 모색.”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1999 제VI권 제1호.
- 김창수.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미동맹의 미래.” 김학성 외. 『한반도 평화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가례예프. “아태지역 안보 강화 및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강대국의 역할.”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1.
- 고대원. “탈냉전 이후 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와 군사력 변화양상.” 김달중·문정인·이석수 외. 『새천년 한반도 평화구축과 신지 역 질서론』.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 곽태환·주승호. “21세기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통일과 그 이후.”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10권1호, 1998년 상반기.
- 구라타 히데야. “일중한 안전보장협력과 일한관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주최 2001년도 국제학술회의(2001년 11월 23일), 『동북아 신질서와 한·중·일 협력』 발표 논문.
- 김기정.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비교검토” 정진위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서울: 법문사, 1998.
- 김명섭. “국가안보, 인간안보, 민족안보: 남북한 화해협력시대를 위한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모색.” 2001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2001년 10월 12일),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국가안보』 발표 논문.
- 김성한. “한미동맹체제와 주한 미군: 역할 변화의 모색.”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1999 제VI권 제1호.

- 김우상. “미·중 대결구도하 한국의 안보전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2001 제Ⅷ권 제2호.
- 김주홍.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41집 1호 2001.
- 노경수. “남북한의 대외전략과 교차수교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1.
- 마점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 협조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1.
- 맥데빗. “동북아의 안보 도전과 안보질서 구축.”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1.
- 문정인. “국가안보와 국가정보: 바람직한 정보기구 모색을 위하여.”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2권 1호. 경기도 성남: 세종연구소, 1996.
- 박창권. “전환기 한국의 국방여건과 국방 소요.”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1.
- 베넷, 브루스. “비대칭적 전략과 한국의 군사기획.”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1999 제Ⅵ권 제1호.
- 서문길. “중·일·한 3국의 협력과 중일관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주최 2001년도 국제학술회의(2001년 11월 23일), 『동북아 신질서와 한·중·일 협력』 발표 논문.
- 서주석.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미동맹.” 세종연구소.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제4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2000년 4월 2

- 0~21일).
- 시카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군사적 관리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 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1.
- 신상진.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중국.” 세종연구소.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제4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2000년 4월 20~21일).
- 신지호. “일본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통일.” 북한연구학회 주최 2001년도 동계학술회의(2001년 11월 24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질서의 변화: 남북한의 변화와 주변국의 대응』 발표 논문.
- 심경옥. “주변국의 군사혁신 비전과 전략, 그리고 잠재력 판단.”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2000 제Ⅶ권 제2호.
- 심경옥·유영철. “러시아연방 극동지역의 전략적 이해와 군사력 추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단』 제37호(1997년 봄).
- 안병준. “동북아 지역 정치경제의 구조와 전망.” 홍철·김원배 편저. 『21세기 한반도 경영전략: 지경학적 접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 1999.
- 윤정원. “군사혁신론.”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서울: 박영사, 2001.
- 이 근. “미-테러 사태와 국가-시민사회 관계: 국내 및 국제정치적 함의.” 한국세계지역학회 주최 2001년도 연말 학술회의(2001년 11월 23일) 논문집. 『미 테러사건과 내외 안보환경 변화 전망』.
- 이원덕.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일본.” 세종연구소.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제4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2000년 4월 20~21일).
- 이정민. “남북화해시대 한국 국방의 과제와 방향.” 한국국방연구

- 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1.
- 이진영. “21세기 중국의 대 동북아전략과 한반도.”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주최 2001년도 한국정치학회 국방·안보 학술회의(2001년 11월 16일) 논문집.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 국방의 새로운역할』.
- 이태환. “통일한국의 안보외교: 주변 4강 외교를 중심으로” 이태환 편.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전망과 대책』. 경기도 성남: 세종연구소, 1999.
- 이혁섭.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국가이익의 개념과 변천, 국가이익과 안보환경, 국가이익과 안보전략.”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서울: 박영사, 2001.
- 전 응. “대 테러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한국에의 파급효과와 대응책.” 한국세계지역학회 주최 2001년도 연말 학술회의(2001년 11월 23일) 논문집. 『미 테러사건과 내외안보환경 변화 전망』.
- 전인영. “동북아 군사정세 전망과 한국의 안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래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2001 국방비 관련 학술세미나 논문집.
- 한용섭. “남북관계 개선과 안보의식의 변화.”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1.
- _____. “부문별 국가전략의 상호관계와 우선순위의 변화.”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2권 1호. 경기도 성남: 세종연구소, 1996.
- 현인택.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관계와 한국의 미래지향적 안보정

- 책: 동북아 허리론의 제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1998 제V권 제2호.
- 황병무. “탈냉전시대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전망.”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동북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우리군의 발전방향』.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
- Bae, Jin-Young. “Speed and Timing of Economic Integration: Unification Cost Approach.” Paper presented for International Seminar on *Two Years Since the German Unification: Economic Evaluation and Implication on Korea*. Seoul, 1~2 October 1992.
- Finkelstein, David M. “China’s National Military Strategy.” James C. Mulvenon and Richard H. Yang, ed. *The People’s Liberation Army in the Information Age*.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1999.
- Gong, Gerrit W. “Kore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Amos A. Jordan ed. *Kore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3.
- Green, Michael J. “Japan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 and World Affairs*, Summer 1998.
- Henderson, Gregory. “Korea: Militarist or Unification Policy.” William J. Barnds, ed. *The Two Koreas in East Asian Affair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6.
- Hwang, In K. “A Quest for Korean Unification Via

- Permanent Neutrality." Tae-Hwan Kwak, et al.(eds.). *Korean Unifiction: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84.
- Johnston, Alastair I. "China's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Behavior 1949-1992: A First Cut at the Data." *China Quarterly*, no. 153, March 1998.
- MacDonald, Hugh. "The Place of Strategy and the Idea of Security." *Millennium*, vol. 10, no. 3 (1981).
- Moon, Chung-in. "Conclusion: a Dissenting View on the Pacific Future." Stephan Haggard and Chung-in Moon(eds.). *Pacific Dynamic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Industrial Change*. Boulder: Westview Press, 1989.
- Nye, Joseph S. and Sean M. Lynn-Jones.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 Report of a Conference on the State of the Fie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12, No. 4 (Spring 1988).
- Odom, William O. "The US Military in Unified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II, No. 1 (Summer 2000).
- Scalapino, Robert A. "A Concluding Perspective," Bae Ho Hahn and Chae-Jin Lee, ed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ajor Powers*. Sunghnam: The Sejong Institute, 1998.
- Zoelick, Robert B. "China: What Engagement Should Mean." *National Interest*, no. 46, Winter 1996-7.

3. 기타

『조선일보』

『중앙일보』

『월간중앙』

국방부.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국방부, 2001.

박선섭. “중국이 보는 미래의 세계 안보환경.”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807호(00-14), 2000. 5. 1.

서정해. “군사력의 ‘비대칭성’에 대한 소고.”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771호(99-23), 1999. 7. 5.

이영길. “미중관계의 동향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855호(01-25), 2001. 8. 13.

정용현·문광진.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한반도 해양 안보.”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839호(01-9), 2001. 3. 19.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한·미동맹/주한미군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01-05(2001. 5).

_____. 『동북아의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과 한미관계의 미래』,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01-07(2001. 7).

_____. 『미국의 시각에서 보는 한미동맹/동북아 평화를 위한 정책과 전망』,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01-06(2001. 6. 28).

Japan Defense Agency. *Defense of Japan 2001 White Paper(Summary)*. (<http://www.jda.go.jp/e/wp2001>).